

남양주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안 보고

의안 번호	641
----------	-----

제 출 일 : 2025. 1. 24.

제 출 자 : 남양주시장

1. 제안이유

- 우리시 경강로163번길 44 일원에 추진중인 남양주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BTO-a)의 사업 시행의 조건 등에 관한 실시협약¹⁾ 체결을 위하여 시의회 보고하는 사항임

2. 관계법령

- 「남양주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12조(의회의 동의 등)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얻은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을 체결·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주요내용

☐ 사업개요

- 위 치 : 남양주시 경강로 163번길 44일원 (이패동 적환장 인근)
- 부지면적 : 21,015m²
- 기 간 : 2020년 ~ 2028년
- 사업방식 : 민간투자사업(BTO-a) / 건설 36개월, 운영 20년
- 사 업 량 : 소각시설 250톤/일(125톤/일 × 2기)

☐ 추진경위

- 2020.08.25. :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접수
- 2022.07.18. : 적격성 검토 완료
- 2022.09.08. : 민간투자사업 시의회 동의(원안가결)

1) “실시협약”이란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주무관청과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간에 사업시행의 조건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 2023.01.05. : 제3자 제안공고
- 2023.05.17. : 우선협상 대상자 지정
- 2024.11.06. :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 PIMAC 검토
- 2024.12.12. : 기재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원안가결)

□ 주요내용

- 사업시행자 지정 : (가칭)남양주에코에너지주식회사
- 실시협약(안)

(2020년 11월 30일 불변가격 기준)

	제3자 공고(안)	실시협약(안)	비 고
사업규모	소각시설 250톤/일 소각여열회수시설 지역난방열공급시설 주민편익시설	소각시설 250톤/일 소각여열회수시설 지역난방열공급시설 주민편익시설 굴뚝전망대	-
총사업비	1,747억원	1,852억원	당초 1,746억원에서 상향조정(증106억원) - 전망대굴뚝 : 증) 153억 - 공사비 등 : 감) 47억
세전수익률	미제시	2.95%	당초 3.29%에서 하향조정
건설보조금	997억원(상한)	1,150억원	국비 399억 도비 120억 사비 631억원(안자 200억)
사용료	157,310원/톤(상한)	112,837원/톤	당초 153,324원/톤에서 하향조정
위험분담	보전대상 민간투자비 비율 70% 환수비율 70%	보전대상 민간투자비 비율 70% (협약수입 이하) 환수비율 30% (협약수입 초과) 환수비율 70%	-

□ 향후 추진계획

- 2025. 3월 :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 체결
- 2025. ~ 2028. : 공사 착공 및 준공

- 붙임 1. 사업시행자 지정(안)
2. 실시협약(안)

남양주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BTO-a)
사업시행자 지정(안)

2025. .

남 양 주 시

1. 남양주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BTO-a) 개요

□ 사업개요

○ 시설규모

구 분		시설규모	비고
남양주시 자원회수시설	소각시설	250톤/일	
	소각여열회수시설	6.5MW	
	주민편의시설	체육시설 등 생활지원시설	

○ 총투자비(경상가액 기준)

(단위 : 억원)

총투자비	민간투자비			건설보조금	비고
	소계	자기자본	타인자본		
2,137	839	126	713	1,298	

○ 사업기간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시운전기간 3개월 포함)
-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 사업방식 : BTO-a(Build-Transfer-Operate-adjusted)/ 민간제안

○ 사업시행자

- (가칭) 남양주에코에너지주식회사

2. 사업추진경위

- '21. 03. :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제출 [(가칭)남양주에코에너지(주)]
- '21. 04. : 민간제안서 검토 의뢰(남양주시→PIMAC)
- '24. 04. : 예비타당성조사면제사업 선정(기재부)
- '21. 06. : 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남양주시 고시 제2021-235호)
- '22. 07. : 적격성조사 결과 통보(PIMAC→남양주시)
- '22. 12. : 제3자 제안공고(안)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 '23. 02. : 제3자 제안공고
- '23. 03. : 참가자격사전심사(PQ) 서류 접수 및 심사
- '23. 05. : 사업제안서 평가
- '23. 05. : 우선협상대상자((가칭)남양주에코에너지(주)) 지정
- '24. 07. : 협상완료
- '24. 11. : 공공투자관리센터 실시협약(안) 검토 완료

3. 실시협약(안) 주요내용

□ 사업시행자 및 출자자 현황

구 분	내 용
사업시행자	(가칭)남양주에코에너지 주식회사
출자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출자자 7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케이디비인프라자산운용(주) 70.00% <p style="margin-left: 40px;">((가칭)KIAMCO남양주에코에너지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일반)의 집합투자업자)</p> · 건설출자자 2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한화 12.96% - 정웅종합건설(주) 4.80% - 한솔제지(주) 4.56% - (주)아름종합건설 1.68% · 운영출자자 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대신환경기술 4.20% - 에코이앤오(주) 1.80%

□ 기본약정

- 주무관청은 (가칭)남양주에코에너지주식회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함
- 사업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귀속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20년) 본 시설 무상사용
 -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에게 사용료를 청구

□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 총사업비는 2020년 11월 30일 불변가격 기준으로 185,219백만원으로 함
- 총사업비의 변경은 아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할 수 있음
 - 건설기간 중 물가변동률을 현저하게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공사비 등의 변동
 -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 법령, 정부가 제정하는 설계기준, 설계규칙 및 지침(환경부의 시설기준과 설계기준 포함) 등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및 인·허가 기관의 요구,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결과 그 밖의 민원의 처리방안으로서 실시협약(안) 제33조 제5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인정하여 총사업비가 증감하는 경우
 - 공사범위 변경 등 그 밖의 주무관청의 요구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제1항 3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 일몰시한이 연장되지 않아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경우
 - 제세공과금(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생태계보전협

력금,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기타부대비(도시계획
시설결정, 실시설계 적격심의비,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비)는
실제 납부한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경우 준공 시 정산

- 법정 정산 경비 등의 정산 규정에 따라 경비를 정산하는 경우
- 사업시행자는 건설기간 동안 적기에 자기자본을 납입하고 준공
시점에 자기자본이 총민간투자비의 15%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함.
- 운영기간 동안 자본금 비율을 감사보고서상 건설보조금을 제외한
관리운영권 잔액의 10% 이상 유지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사업제안서 제출 당시 제시한 채권금융기관 등의
대출의향서 또는 조건부 대출확약서를 실시계획 승인신청 시
까지 대출약정서로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함

□ 설계 및 건설에 관한 사항

- 사업시행자는 사업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일
로부터 60일 이내에 총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현금
으로 납부하거나 보증금에 준하는 본 사업 시행에 대한 지급
보증서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보증서
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다만,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
가 있는 경우, 60일의 범위 내에서 동 납부 또는 제출기한을
연장해 줄 수 있음.
- 사업시행자는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단계에서 직접 설계
또는 시공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은 출자자 또는 본

사업에의 참여확약서를 제출한 설계자, 시공자와 협약 및 실시계획에 따라 설계, 공사 수행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 즉시 도급계약의 체결결과 및 증빙자료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고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승인된 실시계획의 내용 및 실시계획에서 정한 공정계획에 따라 본 사업시설의 공사를 수행해야 함.
-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부지의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과 관련한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와 이주대책사업 등의 시행을 주무관청에 위탁하기로 하되, 위탁수수료는 없는 것으로 한다. 주무관청은 위탁받은 업무의 시행을 자신의 비용(업무의 시행에 수반된 제세공과금을 포함한다)과 책임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실 시공 방지, 공사의 원활한 시행 또는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본 사업과 관련된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음.

□ 유지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기 전에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관리운영권을 등록, 관리운영권 설정에 따른 운영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들을 확정하여야 함.

- 운영비용은 2020년 11월 30일 불변가격 기준 131,928백만원으로 함.
- 협약당사자는 아래 사유로 인하여 운영비용이 현저히 증감하는
경우 사용료,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또는 보조금 조정을 요구
할 수 있음.
 - 본 사업시설의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와 관련된 법령 등 또는
정부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
 - 총사업비의 변경이나 주무관청의 요구사항 이행으로 인한 경우
 -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사유나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운영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을
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관리
운영권 설정에 따른 운영개시 60일 전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수익률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 사업수익률은 세전실질수익률로 2.95%(세후 2.89%)로 하고, 본
협약 종료시점까지 변경되지 아니함.
- 기준사용료는 112,837원/톤으로 하며, 최초 사용료는 기준사용

료에 2020년 11월 30일부터 운영개시일 전월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반영하여 산정하되, 운영개시일 전까지 주무관청에게 신고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최초사용료를 제외한 연도별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 1회에 한하여 조정하며, 사업시행자는 매 사업연도에 적용할 사용료를 전년도 말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의 범위 내에서 산정하여 주무관청에 매년도 1월말까지 제출하고,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무관청과의 협의하에 최종적인 사용료를 결정하여, 이를 1월부터 소급적용함.

□ 주무관청 지원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의 건설보조금 2020년 11월 30일 불변가격 기준 115,039백만원으로 함.
- 사업기간 중 본 사업시설에서 발생하는 바닥재와 비산재 안정화처리물은 「남양주 에코랜드」에서 무상처리하되, 「남양주 에코랜드」까지의 운반비는 운영비용에 포함한다. 단, 바닥재와 비산재 안정화 처리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 2조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 본 사업시설을 위한 실시계획 승인 등의 필요한 행정절차 지원
-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사업부지 제공

□ 위험분담에 관한 사항

- 보전 대상 민간투자비는 총민간투자비의 70%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함.

- 운영개시일로부터 매년도 공헌이익이 당해 연도 환수기준금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초과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무관청에 지급하여야 함. 다만, 실제 사용료수입이 추정 사용료수입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에 대한 공헌이익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무관청에 지급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은 당해 위험에 대한 귀책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함.
-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위험의 경우 일차적으로 관련 보험으로 처리하기로 하며, 보험으로 처리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협약에 따라 각각의 분담비율을 정하기로 함.
-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총사업비 증가분, 운영손실분 중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의 80% 한도 내에서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와 협의 결정하여 부담함.
- 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총사업비 증가분, 운영손실분 중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주무관청은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의 90%를 부담함.

□ 협약의 종료에 관한 사항

-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법 제59조, 동법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동법시행령 제40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 주무관청에 본 사업의 매수를 요청할 수 있음.

○ 해지시 지급금

- 건설기간 중 : 기투입된 민간투자자금(총민간투자비-건설이자)을 기준으로 하되, 투입자금의 기회비용 보상범위는 귀책사유별로 지급수준을 차등화하여 산정
- 운영기간 중 : 기 투입된 민간투자자금(총민간투자비-건설이자)의 상각액과 미래기대수익의 현재액을 기준으로 하되, 귀책사유별로 지급수준을 차등화하여 산정

□ 권리의 처분 및 자금의 재조달에 관한 사항

- 사업시행자는 전체 출자지분 중 5% 이상의 출자지분을 가진 출자자(동일기업 집단 내 계열기업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그 공동출자규모가 전체 출자지분의 5% 이상이 되는 경우 당해 공동출자에 참여한 5% 미만의 지분율을 가진 개별 기업 포함)가 그 출자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단, 출자자 간 합병에 의한 지분율 변경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합병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자금재조달 추진 시 공정한 시장가격 및 조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건설기간 중 자본구조 변경 시에는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여야 하고, 운영기간 중 자본구조 변경 시에는 사업시행자의 자기자본비율은 자금재조달 당시 감사보고서상 건설보조금을 제외한 관리운영권 잔액의 1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함.

-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발생시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 40(주무관청) : 60(사업시행자)으로 이익을 공유함.

□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함. 단, 분쟁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협의를 결렬된 것으로 봄.
- 분쟁 해결을 위하여 민간투자법에 의해 설치된 민간투자사업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활용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음.
- 민간투자사업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협약당사자간 합의하에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과 대한민국 법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되, 중재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협약당사자는 분쟁에 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남양주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BTO-a)

실시협약(안)

2025. 00. 00.

남 양 주 시

(가칭)남양주에코에너지주식회사

목 차

전 문	1
제 1 장 총 칙	2
제 1 조 (협약의 목적 및 사업의 개요)	2
제 2 조 (사업의 추진방식)	2
제 3 조 (용어의 정의)	2
제 4 조 (협약의 해석)	12
제 5 조 (문서의 우선순위)	13
제 2 장 기본 약정	13
제 6 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13
제 7 조 (사업시행자의 권리)	14
제 8 조 (사업시행자의 의무)	14
제 9 조 (소유권의 귀속)	15
제 10 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15
제 11 조 (협약의 성실히행)	15
제 3 장 총사업비의 결정 및 변경	15
제 12 조 (총사업비 및 총민간사업비)	15
제 13 조 (총사업비의 변경)	16
제 13 조의2 (총사업비의 변경 등과 민자적격성 확보)	17
제 4 장 재원의 조달 및 투입	18
제 14 조 (사업시행자의 재원조달)	18
제 15 조 (자기자본의 조달 및 투입)	18
제 16 조 (자금차입)	19
제 16 조의2 (자금차입 금액의 투입)	19
제 16 조의3 (자금차입 계약 시의 담보설정)	20
제 5 장 설계 및 건설에 관한 사항	20
제 17 조 (설계, 인허가 등)	20
제 18 조 (실시계획의 승인과 변경 승인)	20
제 19 조 (공사비)	21
제 20 조 (공사기간)	21
제 21 조 (공사의 착수)	22

제 22 조 (공정관리)	22
제 23 조 (설계, 공사의 도급)	23
제 24 조 (관련 법령 등의 준수)	23
제 25 조 (도급·하도급계약으로 인한 책임)	23
제 26 조 (위험물 및 지장물)	24
제 27 조 (국가유산)	24
제 28 조 (사업이행보증금)	25
제 29 조 (지연배상금)	25
제 30 조 (보험가입)	26
제 31 조 (주무관청의 감독)	26
제 32 조 (기성검사)	27
제 33 조 (민원처리)	27
제 34 조 (환경 및 안전관리)	29
제 35 조 (건설사업관리)	29
제 35 조의2 (법정 정산 경비 등의 정산)	30
제 36 조 (실시계획 승인 후 부대사업 시행)	30
제 37 조 (예비준공검사 등)	31
제 38 조 (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	31
제 39 조 (조기준공)	32
제 40 조 (준공 전 사용인가 및 부분 준공)	32
 제 6 장 유지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2
제 41 조 (운영비용)	33
제 41 조의2 (법인세법 변경시 처리)	33
제 42 조 (유지관리 및 운영 관련계약)	34
제 43 조 (운영실적의 제출)	35
제 44 조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계획)	35
제 44 조의2 (유지관리 및 운영)	36
제 45 조 (경미한 사업)	37
 제 7 장 사업수익률 및 사용료	 37
제 46 조 (사업수익률)	37
제 47 조 (사용료의 결정 및 조정)	38
제 48 조 (사용료의 청구)	39

제 8 장 주무관청의 지원에 관한 사항	39
제 49 조 (재정지원)	39
제 50 조 (행정적 지원)	40
제 51 조 (사업부지의 제공)	40
제 52 조 (보상업무)	42
제 53 조 (수요위험의 처리)	42
제 9 장 위험분담금 지급 및 환수금 환수	42
제 54 조 (총민간투자비)	43
제 55 조 (보전 대상 민간투자비)	43
제 56 조 (미보전 대상 민간투자비)	43
제 57 조 (보전 대상 민간투자비 적용 협약차입금리 산정)	44
제 58 조 (보전 대상 민간투자비의 협약차입금리 조정)	44
제 59 조 (투자위험분담 관련 경상 고정 운영비용의 산정)	44
제 60 조 (투자위험 분담 관련 매년도 경상 변동운영비용 산정)	44
제 61 조 (매년도 공헌이익의 산정)	45
제 62 조 (매년도 투자위험분담 기준금 및 환수 기준금의 산정)	45
제 63 조 (매년도 위험분담금의 지급 및 환수금 환수)	45
제 10 장 투자위험 이외의 위험분담에 관한 사항	47
제 64 조 (위험배분의 원칙)	47
제 65 조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처리)	47
제 66 조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및 처리)	48
제 67 조 (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	49
제 68 조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청구 및 이의신청)	51
제 11 장 협약의 종료	51
제 69 조 (기간만료로 인한 협약의 종료)	51
제 70 조 (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료)	52
제 71 조 (협약해지시의 효과)	55
제 72 조 (해지시지급금의 산정)	55
제 73 조 (해지시지급금 지급방법)	56
제 74 조 (매수청구권)	57
제 75 조 (기간만료, 해지 및 매수청구시 선관의무)	58

제 12 장 권리의 처분 및 자금재조달	58
제 76 조 (양도 및 담보의 제공)	58
제 77 조 (사업시행자의 변경)	58
제 77 조의2 (대체자의 선정)	58
제 78 조 (출자자 및 출자지분의 변경)	59
제 79 조 (자금재조달의 절차)	60
제 80 조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의 공유)	60
제 81 조 (자금재조달 여건 보고 및 주무관청의 자금재조달 요청 등)	61
제 13 장 분쟁의 해결	61
제 82 조 (분쟁의 해결)	61
제 83 조 (중재)	62
제 14 장 기타 사항	62
제 84 조 (변경 실시협약의 체결과 재무모델의 반영)	62
제 84 조의2 (본 협약의 변경 제안 등)	63
제 85 조 (협약의 수익자)	64
제 86 조 (주무관청의 협약준수 의무)	64
제 87 조 (일부무효)	64
제 88 조 (묵시적 조건의 배제)	64
제 89 조 (정보공개 및 비밀유지)	65
제 90 조 (통지)	65
제 91 조 (언어)	66
제 92 조 (준거법)	66
제 93 조 (협약의 효력)	66

실시협약 별첨

남양주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BTO-a)

실시협약

전 문

남양주시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는 BTO-a 민간투자사업을 통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남양주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BTO-a)』의 건설·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 및 환경오염방지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주무관청은 이러한 취지하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민간투자법 시행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민간부문이 『남양주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BTO-a)』의 설계·건설·유지관리 및 운영과 사업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남양주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BTO-a)』 제3자 제안공고(이하 “제3자 제안공고”라 한다)을 2023년 02월 23일 공고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주무관청은 2023년 5월 17일 (가칭)남양주에코주식회사(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본 사업의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을 진행하여 본 실시협약의 체결에 이르렀다.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및 출자예정자들은 본 사업의 공공성을 깊이 인식하고 상호 신뢰의 바탕 위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본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 (협약의 목적 및 사업의 개요)

- ① 본 협약은 민간투자법 및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자 제안공고,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에 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본 사업의 범위, 본 사업시설의 범위·규모는 <별첨1>(본 사업의 범위)와 같다.

제2조 (사업의 추진방식)

본 사업은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에 정한 방식에 따라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추진하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3조의2에 따라 손익공유형(BTO-a) 방식으로 투자위험을 분담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본 협약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월: 어느 역월의 특정일자에 시작하여 해당 역월의 그 숫자의 상응일자에 종료하는 기간을 말한다. 다만, 해당 역월에 숫자상으로 상응하는 날이 없는 경우 위 기간은 해당 역월의 최종일에 끝나는 것으로 한다. 개월의 산정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표준시를 기준으로 한다.
2. 건설기간: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3.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비: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용역 및 시공평가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4. 건설기술 진흥법: 대한민국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을 말한다.
5. 건설보조금: 제49조(재정지원)에 따라 주무관청이 본 사업을 위하여 제공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6. 건설사업관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말한다.
7. 건설사업관리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또는 같은 법 제

- 39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와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그 승계인 또는 대체인을 포함한다.
8. 건설이자: 본 사업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비용의 충당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차입하는 자금에 대하여 준공 시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본 협약에서 정한 이자비용을 말한다.
 9. 경미한 사업: 민간투자법 제14조 제4항의 단서 및 본 협약 제45조(경미한 사업)에 따라 주무관청이 인정한 사업을 말한다.
 10. 계열회사: 사업시행자 또는 그 지분을 소유한 자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의한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대한민국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4호의 국외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1. 고정 운영비용: 운영비용 중 수요의 변동과 관계 없이 일정액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본 협약상 변동운영비용을 제외한 운영비용을 말한다.
 12. 공공투자관리센터: 민간투자법 제23조에 따른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를 말한다.
 13. 공사기간: 본 사업시설의 공사착수일로부터 민간투자법에 따른 본 사업시설 전체에 대한 최종준공확인을 신청하는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14. 공사비: 본 협약에서 규정한 공사비로서 <별첨2>(총사업비 및 총투자비)에서 정하는 공사비를 말한다.
 15. 공사착수일: 본 협약 제21조(공사의 착수)에 따라 주무관청에 제출한 착공보고서상의 공사착수일을 말한다.
 16. 공헌이익: 매년도 실제 운영수입에서 본 협약에 따라 산정된 당해 연도 변동 운영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17. 관계기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인허가, 제세공과금 부과 등 행정절차 또는 행정규제의 방식으로 사업시행자의 업무수행에 합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를 의미한다.
 18. 관리운영권: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의 준공확인을 받은 후 실시협약으로 정한 기간동안 동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고 유지·관리하며 시설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민간투자법 제26조에 의한 권리를 말한다.
 19.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20. 기본설계: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감안하여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개략공사방법 및 기간, 개략 공사비 등에 관한 조사, 분석, 비교·검토를 거쳐 최적안을 선정하고 이를 설계도서로 표현하여 제시하는 설계업무로서 각종 사업의 인·허가를 위한 설계를 포함하며, 설계기준 및 조건 등 실시설계용역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21. 기준사용료: 본 협약 제47조(사용료의 결정 및 조정)에서 정한 기준사용료를 말한다.
22. 기준이자율: 그 산정시점(기준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할 기간의 기산일을 의미한다)의 직전 1개월 동안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신용평가등급 AA-인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의 최종호가 유통수익률을 산술평균한율을 말한다. 다만,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만약, 신용등급이 AA-인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이 고시되지 않는 경우 차하위등급의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이 고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만기가 3년 이상인 회사채 중 3년에 가장 가까운 만기를 가진 회사채의 유통수익률로 대체한다. 만약,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도 회사채유통수익률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을 기준이자율로 사용하며,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 협약 제13장(분쟁의 해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23. 담보권: 저당권, 유치권, 질권,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기타 이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24. 독립기관: 본 협약에서 정한 일정한 사항 발생시 해당 사항에 대한 의견을 얻기 위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선정하는 전문성이 있고,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을 말한다.
25. 대리은행(또는 대리기관): 채권금융기관이 대리은행(또는 대리기관)으로 지정하는 금융기관(또는 기관)을 말한다.
26. 매입세액불공제액: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27. 매장유산: 대한민국 법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매장유산을 말한다.
28. 매장유산법: 대한민국 법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29. 물가변동비: 총사업비 산정기준일인 2020년 11월 30일을 기준으로 하여 준공 예정일까지 예상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한 <별첨14>(재무제표 및 재무모

- 델)상의 물가변동비를 말한다. 단 최초사용료 결정을 위한 물가변동비는 실제 준공시까지 발생한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한 물가변동비를 말한다.
30. 미보전 대상 민간투자비: 민간투자비에서 보전 대상 민간투자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31. 민간투자법: 대한민국 법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말한다.
 32. 민간투자법 시행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을 말한다.
 33.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민간투자법 제7조(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공고 등)에 의하여 공고되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말한다.
 34.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민간투자법 제5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말한다.
 35.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민간투자법 제44조의3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분쟁조정위원회를 말한다.
 36. 민원: 본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건설기간 및 운영기간 동안 민원인이 주무관청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어떠한 처분을 요구하여 사업추진 일정이 지연되거나 이 요구를 들어주기 위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37. 민자적격성 재조사: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58조에 따라 공공투자관리센터 또는 전문기관에 재검증을 의뢰하는 민자적격성 재조사를 말한다.
 38. 발굴조사: 매장유산법에 따라 지표조사 결과 국가유산보존을 위하여 국가유산청이 명하는 보존조치로 정밀발굴조사, 시굴조사, 매장유산 표본조사로 구성된다.
 39. 법령: 대한민국 정부의 모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말한다.
 40. 법령 등: 법령 및 정부의 고시, 지침, 훈령 기타 정책을 포함한다.
 41. 법정 정산 경비: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2에 따른 각종 보험료,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 제6항에 따른 퇴직공제부금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 3에 따른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비,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에 따른 환경관리비 등 해당 법률에서 경비의 정산규정을 두는 경비를 말한다.
 42. 변동 운영비용: 운영비용 중 수요의 변동에 따라 비례적으로 변동하는 것이 명확한 운영비용으로서, 본 협약상 변동 운영비용 항목으로 분류된 약품비, 전력비, 연료비, 상하수도비, 재처리비, 소모품비를 말한다.
 43. 보전 대상 민간투자비: 민간투자비 중 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무관청이

위험을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44. 보조금: 민간투자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하나로서 법령 등 및 협약에 따라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무상환의 보조금을 말한다.
45. 본 사업: 본 협약 제1조(협약의 목적 및 사업의 개요) 및 실시계획에 의하여 특정된 본 사업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을 말한다.
46. 본 사업부지: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서 특정되는 본 사업시설의 건설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부지를 말한다. 여기서 부지라 함은 토지, 공유수면, 수로, 지표, 지상 및 지하를 포함한다.
47. 본 사업수입: 본 사업 시행에 따른 추정 사용료 및 운영수입(별첨5)을 말한다.
48. 본 사업시설: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에 의한 방식으로 추진되는 남양주시 자원 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BTO-a)로서 <별첨1>(본 사업의 범위)의 시설을 말한다.
49. 본 협약: 본 실시협약을 말한다.
50. 분기: 해당연도의 1월 1일부터 3월 31일 또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 또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 또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51. 불가항력 사유: 협약당사자 어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제67조(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에 정한 사유로서, 협약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나 사유(또는 상황이나 사유의 결합)로 인해 본 협약상의 의무이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하는 사유를 말한다. 불가항력은 당사자의 합리적 노력이나 예방에도 불구하고 극복할 수 없는 직접적이고 현저한 사태를 말한다.
52. 사업제안서: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2023년 4월 20일자로 주무관청에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말하며, 그 수정 및 변경을 포함한다.
53. 사업기간: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본 협약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54. 사업수익률: 본 협약 제46조(사업수익률)에서 정한 세전 실질수익률을 말한다.
55. 사업시행자: 본 협약의 당사자로서 주무관청으로부터 민간투자법,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자 제안공고 및 본 협약에 따라 본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칭)남양주에코에너지주식회사)를 말하며, 상호는 변경될 수 있다)를 말하며, 적법한 포괄 또는 특정의 승계인을 포함한다.
56. 사업연도: 사업기간 중의 매년 1월 1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단, 사업개시연도의 경우에는 협약 체결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사업종료연도의 경우에는 1월 1일로부터 실제로 운영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57. 사업이행보증: 본 협약의 이행을 보장하고, 본 사업시설의 적기 시공을 도모

하고, 사업시행자가 시공 중에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에 납부 또는 제출하는 현금, 보증보험증권, 은행지급 보증 등을 말한다.

58. 사용료: 본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대가로서 본 협약 제47조(사용료의 결정 및 조정), 제48조(사용료의 청구)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을 말한다.
59. 사용료수입: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으로부터 사용료로서 지급받는 금액의 총액을 말한다.
60. 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와 이에 부속되는 시공도면을 총괄하는 의미를 말한다.
61. 소비자물가지수: 통계청이 통계청 홈페이지의 국가통계포털을 통하여 공표하는 지수로서 당해 시점이 포함된 월의 전 도시 소비자물가지수를 말한다.(통계청이 지수 산정방식을 개편하는 경우, 개편 시점이 속하는 기간부터 개편된 지수를 적용한다.) 전 도시 소비자물가지수가 현재의 방식으로 더 이상 공시되지 않는 경우 협약당사자 간에 합의하는 다른 지수로 대체된다.
62.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 2020년 11월 30일의 소비자물가지수를 100으로 하고 여기에 본 협약에 따라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의 계산기준이 되는 시점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비교 환산하여 산출한 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분을 말하며, 본 협약에서 명시한 불변가격을 경상가격으로 환산할 경우에 적용한다.
63. 수요예측 재조사: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57조에 따라 공공투자관리센터 또는 전문기관에게 의뢰하는 수요예측의 재조사를 말한다.
64. 시공자: 본 사업시설에 대한 공사를 담당하는 자로서 사업시행자로부터 본 사업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65. 시굴조사: 매장유산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라 건설공사 사업 면적 중 매장유산 유존지역 면적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매장유산을 발굴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66. 실시계획: 본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투자법 제15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본 사업의 시행계획을 말한다.
67. 실시설계: 기본설계의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방법과 기간, 공사비,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세부조사 및 분석, 비교·검토를 통하여 최적안을 선정하여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계도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3조 및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작성되는 것을 말한다.

68. 영업일: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대한민국 소재 금융기관들이 영업하는 날을 말한다.
69. 운영개시일: 관리운영권에 따라 운영이 시작되는 날을 말한다.
70. 운영년도: 운영기간 중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최초 운영년도는 운영개시일로부터 당해 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최종 운영년도는 사업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사업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71. 운영비용: 본 협약 <별첨6>(운영비용)의 운영비 내역 항목으로 구분한 비용들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
72. 운영설비: 운영기간 동안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의 운영에 공여하기 위하여 구입하거나 부속시킨 일체의 설비를 말한다.
73. 위험물: 인화성, 발화성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써 동법상 위험물에 해당하는 수량과 관계없이 본 사업에 현저한 손해 또는 방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정도의 물질을 의미한다.
74. 위험분담금: 운영기간 중 매년도 공헌이익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당해연도 투자 위험분담기준금에 미달할 경우, 주무관청이 위험을 분담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을 말한다.
75. 유지관리: 본 사업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본래의 정상적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보수하며, 시간경과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 보수, 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말한다.
76. 인·허가 등: 본 사업과 관련하여 요구되어 정부, 주무관청 그 밖의 관계기관이 행하는 허가, 동의, 인가, 승인, 승낙 등을 말한다.
77. 일 또는 날: 오전 0시부터 시작하여 다음날 0시에 끝나는 연속적인 24시간의 기간을 말한다.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표준시를 기준한다.
78. 자(者): 개인, 회사, 합작사, 법인, 공동투자회사, 조합, 신탁, 비법인단체 또는 정부의 기관을 말한다.
79. 자금재조달(Refinancing): 실시협약(변경실시협약 포함)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출자자 지분, 자본구조, 타인자본 조달조건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80.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사업시행자가 자금재조달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대이익 증가분을 주무관청과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81.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 민간투자법령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이 공표하는 자금재조달에 관련된 세부사항들에 대한 지침을 말한다.

82. 자금조달: 사업시행자가 본사업에 필요한 민간투자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하여 출자자로부터의 자본금 출자와 채권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자금차입을 포함한다.
83. 자금차입: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84. 자금차입계약: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본 협약상의 총민간투자자금 중 자본금으로 조달할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조달을 위하여 채권금융기관 등과 체결한 각종 대출약정 및 계약 등을 말하며, 타인자본에는 사업시행자의 출자자가 대출의 형태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는 자금을 포함한다.
85. 자본금: 본 협약에 따라 사업기간 동안 출자자들이 사업시행자에게 출자금으로 납입한 금액을 말한다.
86. 재무모델: <별첨14>(재무제표 및 재무모델)에 제시된 컴퓨터 프로그램모델로서 대한민국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협약당사자가 합의하여 변경한 재무모델을 포함한다.
87. 전문기관: 민간투자사업 관련 전문성과 실적이 있는 기관 중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88. 정밀발굴조사: 매장유산법에 따라 건설공사 사업 면적 중 매장유산 유존지역 면적 전체에 대하여 매장유산을 발굴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89. 제반공급: 본 사업시설에 공급되는 전기, 통신, 가스, 상수 및 유류 등의 제반공급을 말한다.
90. 제3자 제안공고: 남양주시 공고 제2023-350호(2023년 2월 23일) 남양주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BTO-a) 제3자 제안공고를 말한다.
91. 제세공과금: 본 사업에 대한 공사의 시행, 준공, 등기 및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취득세, 등록세, 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세금, 공과금과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을 말한다.
92. 준공: 본 협약 및 실시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사업시설에 대한 건설을 완료하는 것을 말한다.
93. 준공예정일: 실시계획상의 공정계획에 명시된 준공예정일을 말하며, 본 협약에 따른 공사기간 변경(연장 또는 단축) 시 그 변경 기간을 반영하여 조정한다.
94. 준공일: 주무관청이 본 협약 제38조(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는 준공확인필증에서 준공사실을 인정한 날을 말한다.

95. 준공 전 사용인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법 제22조 제5항에 따라 본 사업시설에 대한 준공 전에 주무관청으로부터 사용인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96. 준공확인필증: 본 협약 제38조(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에 따라 주무관청이 발행하는 본 사업시설의 준공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말한다.
97. 지방계약법: 대한민국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98. 지장물: 본 사업시설 공사의 시행을 현저히 방해 또는 지연시키는 유형물로서 수중, 지상 또는 지하 시설물을 말한다.
99. 지표조사: 매장유산법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국가유산이 매장·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100. 채권금융기관 등: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민간투자자금을 조달할 때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자금을 공여하는 국내외 금융기관 등으로서 연기금 또는 민간투자법상의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자를 포함한다.
101. 총민간사업비: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조의2(총사업비의 산정) 규정에 따라 산정된 총사업비 중에서 본 협약에 따른 건설보조금 등 재정지원금액을 제외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사업비를 말하며, 그 내역은 <별첨2>(총사업비 및 총투자비)에 명시된 바와 같다.
102. 총민간투자비: 총민간사업비, 물가변동비, 건설이자의 합계금을 의미한다.
103. 총사업비: 본 사업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총액이며,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조의2 규정에 따라 산정되며, 그 내역은 <별첨2>(총사업비 및 총투자비)에 제시된 금액을 말한다.
104. 총사업비 검증 관련기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88조에 따라 총사업비 검증을 위해 주무관청의 의뢰로 공사비의 적정성 및 설계의 경제성 검토 등을 수행하는 조달청, 한국환경공단, 관련 연구기관 등을 말한다.
105. 최초사용료: 본 협약에 따라 운영개시일에 적용할 사용료를 말한다.
106. 추정 폐기물량: 본 사업시설에서 처리되는 추정 폐기물량으로서 본 협약 <별첨4>(사용료 산정을 위한 추정 폐기물량)에 명시된 반입량을 말하며, 본 사업시설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은 남양주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및 “남양주시 자원순환시설(2024년 1월 11일에 공고된 “남양주시 자원순환시설 민간투자사업(BTO-a)”에 따른 시설로서 이하 “남양주시 자원순환시설”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소각대상폐기물(재활용잔재물, 음식물협잡물, 음식물소화탈수슬러지, 대형폐기물)을 의미한다.
107. 출자자: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출자하는 당사자를 말하며 제78조(출자자 및

- 출자지분의 변경)에 따른 그의 적법한 포괄승계인 및 특정승계인을 포함한다.
108. 출자예정자: 본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법인으로 설립되기 이전단계에서 법인 설립 후 출자자로 될 자로 예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109. 타당성 분석: 본 협약 체결 이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수요예측 재조사의 후속 절차로서 또는 민자 적격성 재조사 절차에서 수행하는 타당성 분석을 말한다.
110. 투자위험분담 기준금: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3조의2에 따른 손익공유형에서 주무관청의 위험분담금 산정을 위한 기준 금액을 말한다.
111. 표본조사: 매장유산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라 건설공사 사업면적 중 매장유산 유존지역 면적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굴조사 및 정밀발굴조사 조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매장유산법 제11조에 따른 발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매장유산의 종류 및 분포 등을 표본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112. 해지일: 본 협약의 중도해지 통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또는 주무관청의 매수인정 통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을 말한다.
113. 협약당사자: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본 협약에 따라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까지는 출자예정자를 포함)를 말한다.
114. 환수금: 운영기간 중 매년도 공헌이익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당해 연도 환수 기준금을 초과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이익 공유를 위해 주무관청에 지급하는 금원을 말한다.
115. 환수 기준금: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3조의2에 따른 손익공유형에서 주무관청의 초과이익 환수금 산정을 위한 기준 금액을 말한다.

제4조 (협약의 해석)

문맥상 달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협약은 다음 각 항을 기준으로 해석된다.

- ① 본 협약상 모든 계약 및 협약에 대한 언급은 그의 수정 및 변경을 포함한다.
본 협약상 법령 등에 대한 언급은 본 협약 체결일 현재 효력을 가지는 법령 등을 말하며, 그 개정 및 타 법령 등으로 대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② 본 협약상 단수 형태의 언급에는 복수 형태의 언급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③ 본 협약을 해석할 때 각 조항의 표제는 편의상 기재한 것일 뿐이어서, 계약의

일부가 아니며 해석상 기준이 될 수 없다.

- ④ 본 협약상 “포함한다” 및 “포함하여”는 “포함하나 이에 한정하지 않음”으로 해석한다.
- ⑤ “등”이라 함은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또한 “유사한” 또는 “관련되는 사항”을 포함한다.
- ⑥ 본 협약에서 조, 항, 호, 표 또는 별첨이 언급될 때에는, 명백히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본 협약에 들어 있는 조, 항, 호, 표 또는 별첨을 의미한다.
- ⑦ 협약당사자 및 시공사, 건설사업관리자, 채권금융기관, 그 밖의 본 협약상 어느 당사자에 대한 언급은 그들의 승계인 또는 양수인을 포함한다.
- ⑧ 본 협약상 주무관청에 대한 언급은 주무관청이 그 권한을 하부 행정기관 또는 제3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 그 권한을 수임 또는 수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 ⑨ 본 협약상 기간의 계산은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제155조 내지 제161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문서의 우선순위)

- ① 본 협약과 본 협약에서 언급된 그밖의 서류들은 본 협약에 달리 표시되지 않는 한 본 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그 전에 협약당사자간에 이루어진 모든 의사표시 또는 합의에 우선한다.
- ② 본 협약을 구성하는 문서들의 해석상 모호함 또는 불일치 점이 있는 경우 협약 당사자는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이러한 모호함 또는 불일치점을 해결한다.
 - 1. 민간투자법
 - 2. 민간투자법 시행령
 - 3. 제3자 제안공고
 - 4.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 2 장 기본 약정

제6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 ①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 및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자 제안공고, 본 협약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가칭)남양주에코에너지주식회사를 본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로 지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본 협약 제18조(실시계획의 승인과 변경 승인)에 의한 실시계획 승인신청 전까지 사업시행법인을 설립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 협약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사업의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단계에서 제출한 법인설립계획에 따라 사업시행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출자자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사업 참여가 곤란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제출한 법인설립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③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법인을 설립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제7조 (사업시행자의 권리)

- 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 및 권한과 권리를 설정, 부여한다.
 - 1.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설계 및 건설
 - 2. 본 사업부지 내에 국·공유 재산을 실시계획이 고시된 날로부터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일까지 무상으로 사용. 다만, 공익적 목적 등의 사유로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명시된 용도를 제외하고는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 3. 본 협약 및 관리운영권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무상사용 · 수익
 - 4. 본 협약 및 관리운영권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운영 및 사용료의 청구, 수령
- ② 사업시행자가 본 협약을 위반하는 경우와 본 협약 및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무관청은 본 사업기간 동안 제1항에 정한 사업시행자의 자격, 권한 및 권리를 철회, 취소, 박탈 또는 변경할 수 없다.

제8조 (사업시행자의 의무)

-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민간투자법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포함한 민간투자법령 등과 제반 법령 등을 준수하고 본 협약이 정한 바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책무를 지며, 본 사업시설의 건설과 유지관리 및 운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따라 본 사업시설의 설계, 공사, 유지관리 및 운영,

자금조달, 그 밖의 본 협약의 이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본 협약에서 규정한 위험을 부담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사업제안서 제출 당시 제시한 채권금융기관 등의 대출의향서 또는 조건부 대출확약서를 실시계획 승인신청 시까지 대출약정서로 변경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사업을 본 협약에 따라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소유권의 귀속)

- ① 본 사업시설의 소유권은 본 사업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귀속된다.
- ② 본 협약이 중도해지 되거나 매수청구에 따라 매수되는 경우 또는 기간만료로 인해 종료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의 모든 권리, 권한과 시설 자산(설비 및 지적재산 포함)의 귀속은 본 협약 제11장(협약의 종료)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①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20년으로 한다.
- ② 본 사업시설이 준공된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른 관리운영권을 설정하며,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본 사업시설을 무상사용할 수 있고, 본 협약 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대하여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 (협약의 성실히행)

- ①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에 따른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법령 등을 준수하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제 3 장 총사업비의 결정 및 변경

제12조 (총사업비 및 총민간사업비)

총사업비는 <별첨2>(총사업비 및 총투자비)와 같이 2020년 11월 30일 불변가격 기준 금185,219백만원이며, 총사업비에서 건설보조금 금115,039백만원을 제외한 금70,180백만원을 총민간사업비로 한다. 총사업비는 본 협약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다. 단,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비는 총사업비에서 제외되었으며, 제외된 비용은 주무관청에서 별도 부담한다.

제13조 (총사업비의 변경)

- ① 본 협약 체결 시에 확정된 총사업비는 변경하지 않는다.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본 협약에서 결정된 총사업비의 조정이 필요하면 양 당사자가 상호 합의하여 총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다.
 1. 건설기간 중 물가변동률을 현저하게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공사비 등의 변동
 2.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3. 법령, 정부가 제정하는 설계기준, 설계규칙 및 지침(환경부의 시설기준과 설계기준 포함) 등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4.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및 인·허가 기관의 요구,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결과 그 밖의 민원의 처리방안으로서 제33조(민원처리) 제5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인정하여 총사업비가 증감하는 경우
 5. 공사범위 변경 등 그 밖의 주무관청의 요구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6.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제1항 제3호의2에 따라 본 사업시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 동 조항이 2026년 12월 31일 이후 일몰시한이 연장되지 않아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경우
 7. 본 협약 제35조의2(법정 정산 경비 등의 정산)규정에 따라 경비를 정산하는 경우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세공과금(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생태계보전협력금,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기타부대비(도시계획시설결정, 실시설계 적격심의비,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비)는 실제 납부한 금액과 본 협약상 금액 간 차이가 발생할 경우 준공 시 정산하여 총사업비에 반영하기로 한다. 단, 사업시행자 귀책사유로 발생한 초과분은 정산에서 제외하며, 제51조(사업부지의 제공) 제4항에 따라 정산 가능금액은 반영하기로 한다. 다만, 본 협약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 시 취득세 과세표준에는 본 협약상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업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③ 협약 체결 시 확정된 건설사업관리비 금액보다 사업시행자와 건설사업관리자와의 실제 건설사업관리 계약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비 금액이 더 낮아 건설사업관리비 차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협약상의 총사업비에서 그 차액만큼을 공제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총사업비를 변경한다.
- ④ 총사업비의 변경은 승인된 실시계획의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내용·성능·규격 등이 현저히 다른 경우를 포함. 이하 “신규비목”이라 함)은 신규비목에 대한 설계가를 산출한 후 동 설계가에 실시협약 상 공사비의 설계가 대비 적용 비율을 곱한 금액 범위 안에서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설계가와 동 설계가에 실시협약 상 공사비의 설계가 대비 적용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 ⑤ 본 협약 제67조(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의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총사업비를 변경하기로 하는 경우, 제67조(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에 의한 사업시행자 부담분은 총사업비 변경부분에서 제외한다.
- ⑥ 협약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 협약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사업비 검증 관련기관에게 민간투자법, 지방계약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의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비의 적정성 및 설계의 경제성 검토 등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총사업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단, 총사업비 중 공사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 ⑦ 제1항에 의하여 총사업비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 제49조(재정지원) 제1항에 명시된 건설보조금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무관청은 조정된 건설보조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와 병행하여 협약당사자는 사용료 조정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조정으로 해당 사유의 해소가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가능하다고 협약당사자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협의에 의해 사용료를 조정하거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사업비의 변경에 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제13장(분쟁의 해결) 절차에 따라 해결한다.
- ⑧ 협약당사자는 본 조에 따른 총사업비의 변경 사유로 합의하는 경우 본 협약 제84조(변경 실시협약의 체결과 재무모델의 반영)에 따라 재무모델에 반영한다.
- ⑨ 주민편익시설의 종류 등은 본 협약 사업비 한도 내에서 실시설계 시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제시하고, 공사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총사업비에 반영한다.

제13조의2 (총사업비의 변경 등과 민자적격성 확보)

- ① 주무관청은 본 협약 체결 이후 물가인상분 및 지가상승분을 제외한 사업물량 또는 토지 등의 규모 증가로 인하여 본 사업의 당초 제3자 제안공고와 비교하여 총사업비가 100분의 2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민자적격성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 ②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 제13조(총사업비의 변경)에 따라 민자적격성 재조사를 실시한 후 재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민자적격성이 확보되는 수준에서 변경 실시 협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제 4 장 재원의 조달 및 투입

제14조 (사업시행자의 재원조달)

- ① 본 협약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재원의 조달은 사업시행자의 책임하에 추진하며 본 협약 체결 이후 사업시행자의 재원조달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자금조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본 협약과 재무모델에서 제시한 자금조달 조건을 최대한 준수하여 실시계획 승인의 신청 시까지 주무관청에 민간투자자금 조달과 관련된 출자 약정서 및 자금차입계약서 등 자금조달 관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한다.

제15조 (자기자본의 조달 및 투입)

- ① 사업시행자는 총민간투자비의 15%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서 정한 자금조달계획에 따라 실시계획승인의 신청을 하여야 하고 출자(예정)자로 하여금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득한 실시계획승인신청서상 자금조달계획에 따라 출자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 협약 제13조(총사업비의 변경)에 따라 총사업비의 변경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은 총사업비 변경 부분을 고려하여 자금조달 계획을 변경하도록 한다.
- ③ 본 협약 체결 시 공사의 계획공정률을 반영한 자기자본의 투입일정은 <별첨 8>(자금투입계획)과 같다.
- ④ 사업시행자는 건설기간 동안 제2항의 투입일정에 따라 적기에 자기자본을 납입하여야 하며 준공시점에 총민간투자비의 15%이상이 자기자본이 되도록 하

여야 한다.

- ⑤ 사업시행자는 운영기간 동안 자기자본 비율을 감사보고서상 건설보조금을 제외한 관리운영권 잔액의 1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자금차입)

- ① 사업시행자는 채권금융기관 등과 체결한 자금차입 계약이 본 협약과 재무모델에서 정한 자금차입 조건과 비교하여 차입금액, 차입금리, 원리금 상환기간 또는 부채상환금 적립조건 등에 현저한 변경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실시계획의 변경 승인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거나 별도로 주무관청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선순위채 조달을 위한 자금차입계약을 출자자와 체결하는 경우, 차입금리는 출자자가 아닌 자로부터의 경쟁을 통하여 조달할 수 있는 금리를 적용하도록 노력하고, 만약 출자자로부터 선순위채를 조달하고자 한다면 선순위채 중 출자자로부터의 조달 비중을 70% 이내로 하도록 노력한다.
- ③ 사업시행자가 본 협약 또는 승인받은 실시계획과 달리 후순위채를 조달하는 경우 후순위채에 대한 상세 조달계획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주무관청 이 이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주무관청은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달계획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주무관청이 후순위채 조달계획의 조정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용하도록 노력하고, 조정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 한다.
- ④ 본 협약 제13조(총사업비의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본 협약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자금을 조달하여야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추가 조달사유, 자금차입의 규모 및 조달조건을 주무관청에 통지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제84조(변경 실시협약의 체결과 재무모델의 반영)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실시협약 및 재무모델을 변경하도록 한다.

제16조의2 (자금차입 금액의 투입)

사업시행자는 채권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조달한 자금 차입금액을 <별첨8>(자금투입계획)에 따라 투입하여야 한다.

제16조의3 (자금차입 계약 시의 담보설정)

- ① 사업시행자가 채권금융기관 등에게 본 사업의 관리운영권을 목적으로 한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근저당권을 설정하고자 할 경우 주무관청에게 본 사업의 시행을 위한 자금차입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포함한 담보 약정에 관한 제반서류들을 제출하고, 주무관청이 이를 검토한 결과 본 협약이 정한 바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근저당권 설정을 승인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채권금융기관 등과의 자금차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동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사유의 발생 등으로 채권금융기관 등이 근저당권을 실행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 5 장 설계 및 건설에 관한 사항

제17조 (설계, 인허가 등)

-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승인 신청 시에 관련 법령 등, 본 협약, 제3자 제안공고 (질의답변서 등 포함), 사업제안서 등에 따라 본 사업시설에 대한 실시설계를 수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업제안서는 본 협약 체결시 실시설계 수행을 위해 보충적으로 사업제안서를 적용하기로 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종 인·허가 등 및 협의가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 (실시계획의 승인과 변경 승인)

-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하는 서류(소요자원 확보 대책, 자금조달 협약서 포함)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주무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단, 주무관청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주무관청은 본 협약,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에 합의한 결과가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민간투자법 및 민간투자법 시행령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서면 통지한다.

- ③ 사업시행자의 실시계획승인 신청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협약,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에 합의한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무관청이 판단할 경우 그 신청내용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정하여 수정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이 승인한 실시계획 내용(첨부서류 및 도면 포함)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경 사항을 적시하여 주무관청에 변경 승인을 신청하고 변경 승인을 받도록 한다. 다만, 민간투자법 제15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기조달한 자금 또는 기투입한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⑥ 제2항에 의하여 주무관청이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제4항에 따라 변경 승인을 하는 경우에도, 실시계획에 따른 본 사업 시행에 관한 책임은 주무관청에 이전되지 않고 사업시행자에게 있다.

제19조 (공사비)

공사비는 <별첨2>(총사업비 및 총투자비)에 명시된 바와 같이 2020년 11월 30일 불변가격 기준 금150,396백만원으로 한다.

제20조 (공사기간)

- ① 본 사업시설의 공사기간은 공사착수일로부터 36개월(시운전기간 3개월 포함)로 한다.
- ② 제13조(총사업비의 변경)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의거 공사기간 연장 또는 단축이 필요한 경우 그에 상응한 만큼 제1항의 공사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한다.
- ③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불가항력 사유, 그 밖의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의 착수시기 연기 또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고 주무관청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공사의 착수시기 또는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21조 (공사의 착수)

- ① 사업시행자는 공사에 수반되는 각종 인·허가 신청관련 업무를 적기에 완료하여 본 사업시설의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② 본 협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고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승인된 실시계획의 내용 및 실시계획에서 정한 공정계획에 따라 본 사업시설의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건설사업관리자로부터 확인받은 착공보고서를 공사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착수일로부터 30일이 지나도록 실시계획 및 본 협약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본 협약을 해지하고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2조 (공정관리)

-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 따라 공정계획을 수립하고, 진도율 및 기성 관리 등 공정이 적절히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매월 및 매 분기별로 주무관청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제1항에 따른 공정관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관리자가 확인한 공사추진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매년 12월 말까지 건설사업관리자가 확인한 본 사업시설 공사의 전체 공정 및 차기년도 예정 공정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공정계획과 공사착수일로부터 분기별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실적 누계공정률이 실시계획에서 정한 공정계획의 누계 계획공정률 대비 90% 미만인 경우 부진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정상적으로 공정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실시계획에서 정한 공정계획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정계획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조정된다.

제23조 (설계, 공사의 도급)

- ① 사업시행자는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단계에서 직접 설계 또는 시공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은 출자(예정)자 또는 본 사업에의 참여확약서를 제출한 설계자, 시공자와 본 협약 및 승인된 실시계획에 따라 설계, 공사의 수행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 즉시 도급계약의 체결결과 및 증빙자료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급인 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제3자 제안공고 및 사업제안서에 제시된 수급인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이후에 변경할 수 있다.

제24조 (관련 법령 등의 준수)

- ① 사업시행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으로 하여금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수급인이 본 사업시설의 설계 또는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 및 하수급인이 본 사업시설의 시공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 등은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구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25조 (도급·하도급계약으로 인한 책임)

- ① 사업시행자는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으로 인한 체불노임 등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공사도급관련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②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도급·하도급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1항의 체불 노임 등 수급인에 대한 제반 채무의 변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이의 시정명령을 하고 사업시행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조치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의무사항을 설계자, 시공자 또는 하수급인이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본 협약상의 자신의 의무, 채무 또는 책임으로부터 면제될 수 없다.
- ④ 주무관청은 설계자, 시공자 또는 그 하수급인에 대하여 설계, 공사의 도급계약 또는 그 하도급계약으로부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계약도 받지 아니한다. 다만, 본 협약의 해지시 주무관청에 의한 관련 계약 승계 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26조 (위험물 및 지장물)

- ① 사업시행자는 공사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본 사업시설의 기능 및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각종 지상·지하 위험물 및 지장물을 조사하고 그 이설여부 및 공사방법 등을 판단하여 관련 사항을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나 실시계획 승인 당시 예상하지 못한 위험물 또는 지장물이 본 사업부지 내에서 발견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를 즉시 주무관청에 통지하고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사업부지 내에서 발견된 위험물의 제거 또는 중화 및 지장물의 이설 등에 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합리적인 조사에도 불구하고 발견할 수 없었던 위험물이나 지장물의 발견으로 인한 처리비용에 대해서는 제67조(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 제1항의 사유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27조 (국가유산)

- ① 사업시행자는 매장유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매장유산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 및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부지 내에서 매장유산을 발견하는 경우 매장유산법 등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지표조사에 따른 국가유산 보존 조치로 매장유산 발굴조사(표본조사, 시굴조사 또는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우선 부담한 후 본 협약 제35조의 2(법정 정산 경비 등의 정산)에 따라 정산하여 총사업비에 반영한다.
- ④ 국가유산의 발굴조사로 인한 공사기간의 조정 등에 대해서는 본 협약 제67조(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 제1항의 사유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28조 (사업이행보증금)

-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따른 사업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총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보증금에 준하는 본 사업 시행에 대한 지급보증서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제2항에서 규정하는 보증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다만,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의 범위 내에서 동 납부 또는 제출기한을 연장해 줄 수 있다.

- ② 제1항의 지급보증서 또는 사업이행보증보험증권이 대표출자자 또는 설립예정 법인 명의로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법인설립 즉시 그 명의를 신규 설립법인의 명의로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 사유로 본 협약이 중도해지되거나 본 사업 시설이 매수되는 경우, 본 사업시설에 대한 준공확인필증이 교부되는 경우,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제공된 현금, 사업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지급보증서를 사업시행자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 ④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주무관청이 본 협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사업이행보증금은 주무관청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가 사업이행보증보험증권(또는 지급보증서)을 제출한 경우 그 조건에 따라 주무관청은 보험금(또는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제1항의 사업이행보증금 대상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증액된 대상금액에 해당하는 이행보증금을 추가로 제1항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납부하거나, 기 제공된 지급보증서 또는 보험증권을 대체하여 주무관청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29조 (지연배상금)

- ①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본 사업 시설의 준공예정일(본 협약에 의한 연장기일 포함)을 초과하여 준공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지연배상금)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지연배상금률)가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예정일(본 협약에 의한 공사기간 연장 시 그 기간이 반영된 준공예정일) 다음날로부터 본 사업시설의 준공일까지의 지연 배상금을 주무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 법상 계약금액은 총사업비에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기성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총사업비 가격기준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대한 소비자물가지수변동 분을 반영한 금액을 의미한다.
- ②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을 준공하지 못하여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 협약을 해지하거나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또는 그 밖의 민간투자법 및 민간투자법 시행령 등에 규정된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이행보증금은 주무관청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가 사업이행보증보험

증권(또는 지급보증서)을 제출한 경우 그 조건에 따라 주무관청은 보험금(또는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제30조 (보험가입)

- ① 사업시행자는 <별첨10>(보험가입)에 따라 보험에 직접 가입하거나 시공사 등으로 하여금 당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들 보험이 사업기간 동안에 유효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보험계약서 및 관련 목록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의 조건이 변경된 경우 이를 주무관청에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가 보험사고로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 보험금 수령내역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보험금은 당해 보험사고의 치유를 위하여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용내역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가 본 협약에 따른 보험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담하게 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31조 (주무관청의 감독)

- ①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 및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실시공 방지, 공사의 원활한 시행 또는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본 사업과 관련된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②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건설상황, 품질관리 등에 대하여 매분기 1회 이상 (매분기 초일로부터 14일 이내) 주무관청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건설기간 동안에 본 사업시설이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 따라 건설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일정시기에 본 사업시설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검사일로부터 30일 이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검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사업시행자는 검사의 방법, 내용, 시기에 대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⑤ 제3항의 검사의 결과, 본 사업시설이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 따라 건설되지 않았다고 주무관청이 판단할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 ⑥ 제1항 내지 제5항에 소요되는 비용 중 주무관청의 감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의 조사 및 시정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

시행자가 각각 부담한다. 다만, 주무관청이 본 협약 제65조(사업시행자의 귀책 사유 및 처리)에서 정한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업무감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위탁 등을 통해 전문가 등의 조력을 받게 되는 경우 이로 인한 모든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32조 (기성검사)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의 공사기성에 따라 시공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자에 의한 기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건설사업관리자는 기성검사 완료 후 7일 이내 주무관청 및 사업시행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 (민원처리)

- ① 본 사업 시행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민원의 처리와 관련하여 본 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 ② 협약당사자는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제3자의 민원 또는 청구를 접수한 경우,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 민원의 발생 사실과 발생 원인 등을 서면 통보한다.
- ③ 협약당사자는 제2항의 서면 통보를 받은 이후 30일 이내에 민원의 처리 방법, 처리비용 등에 대해 협의하며, 사업시행자는 위 사전 협의한 내용에 따라 성실한 자세로 민원을 해결하여야 한다.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요청하는 경우 민원 해결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한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관계기관의 요구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이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협의 시, 민원의 발생 원인과 협약당사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민원의 처리 책임 주체와 민원처리 비용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기로 한다.
 1. 본 협약에서 사업시행자의 의무 또는 책임 사항으로 규정한 설계, 시공,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 민원처리는 사업시행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한다.
 2. 본 실시협약에서 주무관청의 의무 또는 책임 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제51조(사업부지의 제공), 제52조(보상업무) 등]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민원처리는 주무관청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협약당사자는 분담비율을 협의하여 민원 처리비용을 분담하도록 한다.
 - 가. 민원이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여 책임 범위

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나. 민원이 제1호의 사업시행자의 의무 또는 책임 사항 영역에서 발생하였으나 사업시행자의 법규 위반 또는 귀책사유 없이 발생하는 경우

다. 민원이 제2호의 주무관청의 의무 또는 책임 사항 영역에서 발생하였으나, 주무관청의 법규 위반 또는 귀책사유 없이 발생하는 경우

- ⑤ 제4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민원의 처리를 제외하고, 본 조에서 주무관청이 부담하기로 하는 민원처리 비용 중 협약당사자가 합의하여 총사업비 항목으로 추가 반영하기로 한 경우 본 협약 제13조(총사업비의 변경) 제1항 제4호에 따라 추가 반영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자본금 및 차입금의 추가 자금조달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의 동의를 얻도록 한다.
- ⑥ 본 조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은 민원처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처리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본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와 사전 협의 없이 처리할 수 있다.

제34조 (환경 및 안전관리)

-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 및 관련 법령 등에서 규정한 사항과 실시계획 및 본 협약에서 제시한 환경관리, 안전관리 및 긴급 구난대책을 수립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시공을 위한 안전관리조직을 갖추어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 진흥법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자로부터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점검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공사 중 주무관청이 협약 및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안전점검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주무관청은 이를 직접 시행하고 그 소요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제35조 (건설사업관리)

- ① 주무관청은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정한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하고,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이 선정한 건설사업관리자와 건설사업관리(시공 단계에서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의 확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주무

관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금액은 주무관청이 선정한 건설사업관리자가 제시한 입찰금액으로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건설사업관리자로 하여금 본 사업시설 공사에 대하여 본 협약 및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은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을 감독한다.
- ③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착수하기 전에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실시체계, 공사에 대한 검사 등을 포함한 제반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업무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 및 주무관청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자는 이에 대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에게 건설사업관리 업무현황을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라 보고 하여야 한다.
- ④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협약 제31조(주무관청의 감독)에 따른 검사, 제32조(기성 검사)에 따른 기성검사, 제37조(예비준공검사 등)에 따른 예비준공검사, 제38조(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에 따른 준공검사 등을 수행하고, 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⑤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와 그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와 관련된 본 협약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사업시행자 귀책사유로 본 협약에서 정한 공사기간이 지연되는 경우, 이로 인한 건설사업관리 추가비용은 총사업비 증가없이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주무관청 귀책사유 및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시, 이로 인한 건설사업관리기간 연장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본 협약 제66조(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및 처리), 제67조(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에 따른다.

제35조의2 (법정 정산 경비 등의 정산)

- ① 법정 정산 경비는 정산 조정하고 이를 반영하여 총사업비를 변경하기로 한다. 다만 정산 경비의 개별 항목별 증감을 반영한 정산경비 총액은 본 협약상 정산 경비 총액을 초과하여 정산할 수 없다.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법정 정산 경비, 본 협약 제27조(국가유산) 제3항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조사 비용 및 제13조(총사업비 변경) 제3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비 차액 정산 등 정산 경비 정산이 발생할 때마다 주무관청에 정산 경비 조정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주무관청이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 (실시계획 승인 후 부대사업 시행)

- ①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이후 부대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민간투자법 제21조에 따라 부대사업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실시계획의 변경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주무관청은 제1항의 제안서가 접수된 경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61조에 따라 부대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수익성 등을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 ③ 협약당사자는 부대사업 시행으로 인한 사업시행조건 변경을 반영하기 위하여 본 협약 제84조(변경 실시협약의 체결과 재무모델의 반영)에 따라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한다.

제37조 (예비준공검사 등)

-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을 완공하기 90일 전까지 건설사업관리자가 작성한 사회기반시설 예비준공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예비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② 예비준공검사 결과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그 내용을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하며, 사업시행자는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동 미비사항을 보완한 후 본 사업에 대한 준공확인 신청을 해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준공확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본 사업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38조 (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

-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완공 후 건설사업관리자가 확인한 본 사업시설 공사의 준공조서를 첨부한 공사 준공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본 사업에 대한 준공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준공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자는 직접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본 사업시설에 대한 완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에 완공검사의 일정을 통지하고, 주무관청은 완공검사에 입회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준공보고서가 접수된 경우, 주무관청은 동 신청을 접수한 후 14일 이내에 민간투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본 협

약에 위반한 점이 없고 본 사업시설의 정상적인 사용 및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본 사업시설의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한다.

- ④ 제3항의 준공검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무관청은 본 사업시설의 시운전(성능 테스트)을 실시하며 사업시행자는 이를 위해 검사의 입회, 현장설명,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⑤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기 전에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본 협약에 따라 관리운영권의 등록, 관리운영권 설정에 따른 운영개시일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들을 확정하여야 한다.
- ⑥ 주무관청은 준공확인 결과 본 협약 또는 실시계획 승인시의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시공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자를 경유하여 공사준공보고서를 반려하고, 구체적인 미비점을 명확히 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반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⑦ 사업시행자는 제6항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보완한 이후에 신속하게 준공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⑧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준공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른 관리운영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설정하여야 한다.

제39조 (조기준공)

- ① 협약상 준공예정일 이전에 본 사업시설이 준공된 경우(“조기준공”) 준공일로부터 당초 준공예정일까지의 무상사용은 추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 ② 주무관청은 조기준공의 경우 관리운영권 설정 개시시점을 앞당기거나(이 경우 관리운영권 설정이 앞당겨진 만큼 종료시점 역시 앞당겨짐) 조기준공일로부터 준공예정일까지의 본 사업시설에 대한 운영을 사업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0조 (준공 전 사용인가 및 부분 준공)

- ① 주무관청은 본 협약 제38조(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에 따른 본 사업시설에 관한 준공확인필증이 교부되기 전에 본 사업시설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용을 인가할 수 있다.
- ② 사업시행자는 준공 전 사용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본 협약 제38조(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의 준공확인 절차에 준하여 주무관청에 준공 전 사용인가를 위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③ 준공 전 사용인가에 따라 운영하는 기간은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수입 및 비용의 처리는 협약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④ 주무관청은 본 사업시설의 일부가 준공(부분준공)된 시설에 대한 운영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항을 준용한다.

제 6 장 유지관리 · 운영에 관한 사항

제41조 (운영비용)

- ① 본 사업의 총 운영비용은 2020년 11월 30일 불변가격 기준 금 131,928백만원이며, 연도별 부문별 운영비용 내역은 <별첨6>(운영비용)과 같다.
- ② 제1항의 운영비용 중 고정 운영비용은 금 106,259백만원이고, 그 연도별 · 항목별 내역은 <별첨6>(운영비용)과 같으며, 변동 운영비용은 금 25,669백만원이고, 그 연도별 · 항목별 내역은 <별첨6>(운영비용)과 같다.
- ③ 협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운영비용이 현저히 증감하는 경우 사용료,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또는 보조금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 1. 본 사업시설의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와 관련된 법령 등 또는 정부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
 - 2. 제13조(총사업비의 변경) 제1항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이나 주무관청의 요구사항의 이행으로 인한 경우
 - 3. 기타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사유나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운영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 ④ 사업시행자가 제3항에서 규정한 사유의 발생을 근거로 <별첨6>(운영비용)에 규정된 운영비용을 변경할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무관청은 승인 시 법령 등의 변경 등으로 인한 운영비용 절감여부를 고려한다.
- ⑤ 본 협약 제67조(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의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운영비를 변경하기로 하는 경우, 본 협약 제67조에 의한 사업시행자 부담분은 운영비 변경 부분에서 제외한다.
- ⑥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효율적 경영으로 운영비용이 절감되더라도 이를 이유로 사용료의 인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단축, 운영비용 절감액의 환수를 요구할 수 없다.

제41조의2 (법인세법 변경시 처리)

- ① 협약당사자는 사업기간 중 「법인세법」의 개정에 따라 법인세의 증감이 있는 경우 그 증감분에 대하여 사용료,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또는 보조금을 조정하기로 한다.
- ② 본 협약 체결 이후 사업시행자의 차입금액의 법인세 과세를 위한 실제 손금인정한도가 본 협약 재무모델의 차입조건과 달리 확정된 경우 실제 확정된 손금인정한도를 재무모델에 반영하여 사용료를 조정하기로 한다.

제42조 (유지관리 및 운영 관련계약)

-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시설물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관리하여야 하고, 동법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지침(2012.10)」 관련 규정에 준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은 그 수준에 미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또한,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유지보수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유지보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단계에서 직접 운영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은 출자자 또는 본 사업에의 참여확약서를 제출한 전문운영회사(이하 “운영자“라 한다)와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위임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 즉시 위임 또는 위탁계약의 체결 결과 및 증빙자료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가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할 자 또는 위임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제3자 제안공고 및 사업제안서에 제시된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이후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위임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한(또는 체결할) 제3항의 출자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협약의 출자자 및 출자지분의 변경과 관련된 조항에도 부합하여야 한다.
- ⑤ 사업시행자는 제3항의 수임자 또는 수탁자로 하여금 관련 법령 등 및 본 협약

을 준수하게 하여야 하며, 불가항력 상황 등에 대비하여 가입한 보험을 유지 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해당업무를 수임자 또는 수탁자가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본 협약 규정에 의거 부여된 사업시행자의 의무 또는 책임으로부터 면제되지 않는다.

제43조 (운영실적의 제출)

- ① 사업시행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직전 사업 연도의 폐기물 반입량, 반입 폐기물처리량 및 운영현황, 본 사업시설의 유지보수실적 등을 주무관청에게 서면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및 규정, 본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일 때에는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은 회계보고서를 매년 3월 31일까지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주무관청은 폐기물처리현황 및 사용료수입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약 당사자간의 합의로 선정한 제3의 전문성이 있는 독립기관에 의뢰하여 이를 조사,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이러한 조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 ③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령 및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본 사업의 건설 및 유지·관리 현황에 관한 보고서의 작성 등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사회기반시설의 건설 및 관리·운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44조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계획)

-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에 관한 유지관리 및 운영 계획을 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관리운영권 설정에 따른 운영 개시 60일 전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계획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계획서를 해당 사업연도가 개시되는 30일 전까지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계획서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 관련 법령 등의 변경 등 합리적인 사유로 인해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그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제44조의2 (유지관리 및 운영)

-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 제44조(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계획)의 유지관리 및 운영 계획에 따라 본 사업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주무관청은 현장 조사, 사업시행자 조사, 본 사업시설 사용자의 신고 등에 따라 본 사업시설 이용가능성이 유지되는지 확인·점검할 수 있다.
- ③ 사업시행자는 사용자의 본 사업시설 이용이 불가하게 되는 경우 즉시 긴급유지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를 주무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주무관청은 본 사업시설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유지보수 및 관리의 태만 등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본 사업시설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보수, 개량, 개축 등을 시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⑤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운영기간 중 위험을 발생시킬 하자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위험요인을 치유할 수 있는 보수 또는 개량계획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 시행이 완료된 때에는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이행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⑥ 본 사업의 성능보증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른다.
- ⑦ 전력판매와 관련한 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고시기준 및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 ⑧ 제6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의 협약상 대기오염 배출농도 기준 등 관련 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법령에 따른 초과부과금 등 행정제재와는 별도로 <별첨9>(성능보증 및 규제조치)에 따라 본 협약의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단, 사업시행자가 해당 법령에 따른 초과부과금액을 납부한 경우 그 납부금액 상당액은 손해배상액 산정시 공제하되, 이 경우에도 동일한 측정항목에 대한 초과부과금은 중복하여 공제할 수 없다.
- ⑨ 사업시행자는 사업시설의 대수선을 <별첨14>(재무제표 및 재무모델)상의 대수선 대상물건의 명세, 교체시기 및 교체횟수, 대수선비용에 따라 시행한다. 단, 대수선 교체시기는 조절할 수 있다. <별첨14>(재무제표 및 재무모델)에 기재된

대수선 대상물건의 명세, 교체횟수, 비용 등과 달리 대수선이 필요하여 발생되는 추가비용은 사업시행자 자신의 비용과 책임하에 시행한다.

- ⑩ 주무관청 또는 사업시행자는 본조 제9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능개선을 위해 내구연한 이내에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해 교체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교체비용의 부담주체, 부담방법, 교체결과 설비 운영상 이익 배분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 ⑪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에 반입되는 실제 폐기물의 구성과 특질, 기타 성상 등이 본 협약 체결 당시 본 사업 운영기간 중 본 사업시설에 반입될 것으로 추정했던 것과 달라지더라도 본 협약상의 성능보증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로 인한 성능보증기준의 미달 및 그 해소 등에 필요한 비용과 책임 등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45조 (경미한 사업)

-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민간투자법 제14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본 협약 체결 후 주무관청이 인정한 경미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의 내용 및 소요비용과 예상수입, 사업추진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가 본조 제1항의 경미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의 추진 및 수익의 배분 등에 관한 사항은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 7 장 사업수익률 및 사용료

제46조 (사업수익률)

본 사업의 사업수익률은 세전 실질수익률로서 2.95%(세후 2.89%)로 하고, 본 협약 종료시점까지 변경되지 아니한다. 다만 본 협약 제41조의2(법인세법 변경시 처리)에 따른 조정에 따라 세전 실질수익률이 변경되는 경우, 본 협약 제80조(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의 공유)에 따라 자금재조달 이익의 공유를 반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 (사용료의 결정 및 조정)

- ① 본 협약에서 사용되는 본 사업시설의 추정 폐기물량 및 추정사용료 수입은 <별첨4>(사용료 산정을 위한 추정 폐기물량)에 제시된 연도별 추정유입량 및 <별첨5>(추정 사용료 및 운영수입)에 제시된 2020년 11월 30일 불변가격 기준의 추정사용료 수입을 기준으로 한다.
- ② 본 사업의 기준사용료는 112,837원/톤(2020년 11월 30일 불변가격 기준)으로 하며, 최초사용료는 기준사용료에 2020년 11월 30일부터 운영개시일 전월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반영하여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운영개시일 전까지 주무관청에 신고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본 사업시설의 이용방법 및 운영개시일에 적용될 실제 최초사용료
 2. 사용료산출 기초자료
 3. 사용료 청구방법
 4. 기타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최초사용료를 제외한 연도별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 1회에 한하여 조정하며, 사업시행자는 매 사업연도에 적용할 사용료를 전년도 말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의 범위 내에서 산정하여 주무관청에 매년도 1월말까지 제출하고,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최종적인 사용료를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 이를 1월부터 소급적용한다.
- ④ 불가항력 사유,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그 밖의 본 협약에서 인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추가비용이나 손실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주무관청의 부담분 일부를 사용료를 조정하여 해소하기로 협약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추가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협약당사자가 사용료의 적절한 조정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협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정한 전문기관에 사용료 수준조정의 타당성 평가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의뢰결과에 따라야 한다.
- ⑤ 매년도 사용료는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에서 절사하여 산정된 사용료를 적용한다.
- ⑥ 본 사업시설의 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전기에 대한 전력판매수입 기준가격은 전 운영기간 중 동일하게 85.11원/kWh(2020년 11월 30일 불변가격 기준)을 적용하며, 생산된 여열에 대한 열판매수입 기준가격은 전 운영기간 중 동일하게 28,000원/Gcal(2020년 11월 30일 불변가격 기준)을 적용한다.
- ⑦ 본 사업시설에서 생산된 여열은 열판매수입 기준가격인 28,000원/Gcal(2020년

11월 30일 불변가격 기준)으로 주무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남양주시 자원순환 시설에 공급하기로 한다. 단, 남양주시 자원순환시설의 여건에 따라 공급량, 공급시기, 공급형태(스팀) 등은 별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48조 (사용료의 청구)

-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따라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주무관청에게 사용료를 청구할 배타적 권리를 갖는다.
- ②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따라 관리운영권 설정기간동안 본 사업시설로 반입된 폐기물량을 계량(검침)하여 산정된 사용료를 익월 7일(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까지 주무관청에 청구하기로 하며, 주무관청은 동청구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구된 사용료를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 본 사업시설로 반입된 폐기물량 계량(검침) 방법 및 주체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③ 본 협약 제40조(준공 전 사용인가 및 부분 준공)에 의한 사용기간 동안에는 본 조의 제2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 ④ 주무관청이 본 협약에 정한 사용료 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본 조 제2항에 정한 시기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미지급금에 대하여 동 지급 예정일의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기준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 8 장 주무관청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49조 (재정지원)

- ① 본 협약 체결 당시 주무관청이 총사업비 중 일부로서 사업시행자에게 지급 할 건설보조금은 2020년 11월 30일 불변가격 기준으로 금 115,039백만원으로 하며, 건설보조금 지급일정은 <별첨3>(건설보조금 지급일정)과 같다.
-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의한 건설보조금을 분기별로 <별첨3>(건설보조금 지급일정)이 정한 일정에 따르되 공사수행 누계 실적공정률(누계 계획공정률 대비 누계 실적공정의 비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지급을 신청한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건설보조금을 지급할 시점에는 2020년 11월 30일부터 지급대상 분기의 직전분기말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적용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주무관청은 실제공정률이 계획공정률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과된 공정에 대한 건설보조금을 선지급할 수 있다.

- ③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른 누계 실적공정이 누계 계획공정에 미달하여 예정된 건설보조금의 지급을 유보한 경우, 미달된 공정이 만회되었음이 확인된 분기의 건설보조금 지급시 유보한 건설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가 본조 제2항에 따라 건설보조금 지급신청을 하였음에도 동 분기에 대한 건설보조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실제지급일까지 기준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실시협약으로 정한 일정에 따라 자기자본 출자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자금차입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주무관청은 건설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시행자가 본 협약 제22조(공정관리) 제4항에 따라 제출한 부진공정만회대책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실적공정율과 관계없이 당해 분기에 지급하여야 건설보조금 전액(전분기미지급액+금분기지급액)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 ⑦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지급이 유보된 건설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유보된 기간동안의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반영하지 아니한다.

제50조 (행정적 지원)

- ① 본 사업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 실시설계에 대한 기술심의 등의 필요한 행정절차(재해영향평가 협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을 포함)는 주무관청이 추진하고, 본 사업시설의 공사와 관련된 인·허가 등은 사업시행자가 추진하며 주무관청은 필요한 경우 이에 협조한다.
- ② 주무관청은 남양주시 행정구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및 “남양주시 자원순환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대상 폐기물을 본 사업시설에 우선반입 처리토록 협조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의 인·허가 등 행정지원의 결과와 상관없이 사업시행자의 의무인 사항에 대하여는 면책되지 않는다.
- ④ 주무관청은 사업기간 중 본 사업시설에서 발생하는 바닥재와 비산재 안정화 처리물은 「남양주 에코랜드」에서 무상처리하되, 「남양주 에코랜드」까지의 운반비는 운영비용에 포함한다. 단, 바닥재와 비산재 안정화 처리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제51조 (사업부지의 제공)

- ①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부지의 소요계획과 보상일정 및 부지의 인도일정에 대하여 사전 협의한다.
- ② 주무관청은 실시계획 및 공정계획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본 사업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본 사업부지를, 이의 보상이 필요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절차가 완료된 후 즉시, 이의 보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상절차가 완료된 후 즉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주무관청이 본 사업부지를 제공함에 있어서는 사업시행자가 사업기간 동안 제세공과금 및 담보권의 부담 없이 부지에 대한 점유권, 무상사용권 및 그 밖의 본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부지에 대한 점유권, 무상사용권 및 그 밖의 본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권리를 취득하고 행사함에 있어 어떠한 법적, 사실적 부담, 제약이 있는지 사전에 법률실사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실사결과 발견된 법적, 사실적 하자를 지체없이 주무관청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체결 당시에 자신에게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세공과금 등을 조사하여 총사업비에 반영하여야 하며, 누락된 제세공과금이 추후에 발견되는 경우에 그 제세공과금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본 협약 체결 당시 제세공과금 관련 법령 등이 없었던 경우, 본 협약 체결 이후 제세공과금 관련 법령이 변경된 경우 또는 제세공과금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제세공과금의 액수를 산정할 수 없었던 경우 등 본 협약 체결 당시에 사업시행자가 제세공과금 등을 조사하여 총사업비에 반영할 수 없었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제2항에 의한 본 사업부지의 제공시점 이전이라도 사업시행자가 부지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한다.
- ⑥ 주무관청은 사업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와의 협의 없이 본 사업부지를 처분하거나 그 밖의 다른 권리를 설정할 수 없으며 주무관청이 공공의 목적으로 본 사업부지의 일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 ⑦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명시된 용도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다른 목적으로도

본 사업부지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공익적 목적 등의 사유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⑧ 본 협약의 규정에 따라 본 사업부지가 사업시행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경우 그 지연기간에 상응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된다.

제52조 (보상업무)

- ①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본 사업부지의 토지 등(토지, 물건 및 어업권 등의 권리를 포함한다)의 수용 또는 사용과 관련한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와 이주대책사업(수용재결 신청 포함) 등의 시행을 주무관청에 위탁하되, 위탁수수료는 없는 것으로 한다.
-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시행을 자신의 비용(업무의 시행에 수반된 제세공과금을 포함한다)과 책임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53조 (수요위험의 처리)

본 사업시설의 이용에 따른 실제 발생수요가 본 협약에서 정한 본 사업시설의 예측수요와 차이가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로 인한 책임과 위험을 부담한다.

제 9 장 위험분담금 지급 및 환수금 환수

제54조 (총민간투자비)

- ① 본 실시협약 체결시 정한 본 사업의 총민간투자비는 <별첨2>(총사업비 및 총투자비)와 같이 준공예정일 시점 가격 금 83,908백만원이다.
- ② 제1항의 총민간투자비는 준공시점에 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본 협약 상의 매 분기별 민간사업비 투입 금액에 직전 분기말까지의 실제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재산정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총민간투자비를 재산정할 경우 실제 물가변동분 반영에 따른 건설이자 변동분을 정산하기로 하고, 건설이자 변동분의 정산금액은 준공시점에 본 협약 재무모델에 본 협약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여 산정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④ 본 사업의 타인자본 조달에 소요되는 건설이자 산정을 위해 적용되는 선순위

금리는 3.27%이며, 후순위 금리는 9.00%이다.

제55조 (보전 대상 민간투자비)

- ① 본 실시협약 체결시 정한 본 사업의 보전 대상 민간투자비는 본 협약 제54조(총민간투자비) 제1항 총민간투자비의 70%에 해당하는 금 58,736백만원(준공예정일 시점 가격)으로 한다.
- ② 보전 대상 민간투자비는 준공시점에 실제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여 재산정하되, 제54조(총민간투자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준공시점에 재산정된 총민간투자비에 70%를 적용하여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 ③ 본 사업의 준공시점의 사업시행자 실제 선순위차입금이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보전 대상 민간투자비 보다 작은 경우, 실제 선순위차입금을 보전 대상 민간투자비로 본다.

제56조 (미보전 대상 민간투자비)

본 사업의 미보전 대상 민간투자비는 본 협약 제54조(총민간투자비)에 따른 총민간투자비에서 제55조(보전 대상 민간투자비)에 따른 보전 대상 민간투자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57조 (보전 대상 민간투자비 적용 협약차입금리 산정)

- ① 본 사업 보전 대상 민간투자비 적용 협약차입금리는 지표금리에 위험보상을(1.98%)을 합산하여 산정되는 경상 이자율이며 협약체결시의 협약차입금리는 3.27%이다. 다만, 본 협약체결시의 위험보상율은 본 조의 기준차입금리 산정시 변경되지 아니한다.
- ② 운영개시시의 보전 대상 민간투자비 최초 협약차입금리는 제3항의 지표금리를 적용하기로 하며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본 사업시설의 운영개시 후 5년 동안 적용된다.
- ③ 지표금리는 5년 만기 국채수익률을 적용하되 제2항의 협약차입금리를 위한 지표금리는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개시일 직전 5영업일의 5년 만기 국채수익률 평균값을 적용하기로 한다. 이 경우 소수점 3자리 이하의 숫자는 반올림한다.
- ④ 본 사업시설의 운영개시 후 매 5년이 경과할 때마다 1회에 한하여 본 협약 제

58조(보전 대상 민간투자비의 협약차입금리 조정)에 따라 조정된 보전 대상 민간투자비 협약차입금리를 적용하기로 한다.

제58조 (보전 대상 민간투자비의 협약차입금리 조정)

- ① 보전 대상 민간투자비의 협약차입금리는 본 사업시설의 운영개시 후 매 5년이 되는 날의 익일(이하 “조정기준일”이라 한다.)에 조정하기로 한다. 다만, 위험보상율은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 중 변경되지 아니한다.
- ② 지표금리는 조정기준일 직전 5영업일의 5년 만기 국채수익률의 평균값을 적용하기로 한다. 이 경우 소수점 3자리 이하의 숫자는 반올림한다.

제59조 (투자위험분담 관련 경상 고정 운영비용의 산정)

본 협약에 따라 매년도 투자위험분담 기준금 산정에 적용되는 경상 고정 운영비는 본 협약 제41조(운영비용) 제2항의 불변 고정 운영비에 해당 연도의 직전 연도 말까지의 실제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60조 (투자위험 분담 관련 매년도 경상 변동운영비용 산정)

본 협약에 따라 투자위험분담 관련하여 적용할 매년도 경상 변동운영비용은 경상 변동운영비 단가(본 협약 제41조(운영비용) 제2항의 불변 변동 운영비 단가에 해당 연도의 직전 연도 말까지의 실제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적용하여 산정한 단가)에 해당 연도 실제 수요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61조 (매년도 공헌이익의 산정)

본 협약에 따라 투자위험분담 관련하여 적용할 매년도 공헌이익은 매년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실제 운영수입에서 본 협약 제60조(투자위험 분담 관련 매년도 경상 변동운영비용 산정)에 따라 산정된 당해 연도 경상 변동운영비용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제62조 (매년도 투자위험분담 기준금 및 환수 기준금의 산정)

- ① 주무관청의 매년도 투자위험분담 기준금은 <별첨13-1>(투자위험분담 기준금 산정방법)의 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때 적용할 미보전 대상 민간투자비

상환계획은 <별첨13>(미보전 대상 민간투자비 상환 계획)과 같다.

- ② 주무관청의 매년도 환수 기준금은 제1항의 매년도 투자위험분담 기준금에 해당 연도말의 미보전 대상 민간투자비 회수액 {본 협약 제56조(미보전 대상 민간투자비)에 따른 미보전 대상 민간투자비를 20(관리운영권 설정기간)으로 나누어 산출되는 금액(이하 ‘연도별 미보전 대상 민간투자비 회수예정금액’ 이라 한다)에 해당 연도의 운영연차를 곱한 금액에서 전년도 말까지 회수된 미보전 대상 민간투자비 누적액을 차감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이 때, 전년도 말까지 회수된 미보전 대상 민간투자비 누적액은 (ㄱ)전년도 말까지 매년도 공헌이익이 투자위험 분담기준금을 초과한 연도의 공헌이익(공헌이익이 당해 연도 환수 기준금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투자위험분담기준금을 차감한 금액의 합계액과 (ㄴ)연도별 미보전 대상 민간투자비 회수예정금액에 전년도 말까지의 운영연차를 곱한 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한다.

제63조 (매년도 위험분담금의 지급 및 환수금 환수)

- ①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 민간투자법 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운영개시일(조기 준공일 경우 준공예정일 익일)로부터 매 운영년도의 공헌이익이 당해 연도 투자위험분담 기준금에 미달하는 경우, 제5항에 정한 방식에 따라 그 부족액(“위험분담금”)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
- ② 운영개시일(조기 준공일 경우 준공예정일 익일)로부터 매년도 공헌이익이 당해 연도 환수기준금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5항에 정한 방식을 적용하여 그 초과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환수금”)을 주무관청에 지급하도록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지급 및 환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매 사업연도 재무제표가 확정되는 정기 주주총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산이 완료된 사용료수입 현황 등에 관한 자료(공헌이익 산정자료 포함)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주무관청은 반입폐기물 현황 및 사용료 수입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약당사자간의 합의로 선정한 독립기관에 의뢰하여 이를 조사·확인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이러한 조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 ⑤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위험분담금 및 환수금을 확정하고, 동 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금액을 지원하며, 부족액이 있는 경우 차기 연도 5월 말까지 지급한다. 사업시행자는 환수금이 확정되는

경우 동 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주무관청에 지급한다.

- ⑥ 제1항에 의하여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위험분담금을 지급할 경우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에게 환수금을 지급하는 경우, 제5항에 따른 지급기한까지 지급을 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완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 위험분담금 또는 환수금에 기준이자율을 적용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⑦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위험분담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의 법인세 등 부담분이 발생하더라도 추가적인 금전적 지원은 하지 아니한다.
- ⑧ 주무관청은 제44조의2(유지관리 및 운영) 제3항에 따라 본 사업시설의 이용 불가 확인된 경우, 365일(윤년의 경우 366일)에 대한 이용불가기간(일수)의 비율에 따라 해당연도 위험분담금을 차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이용 불가인 경우에는 본 협약 제66조(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및 처리) 및 제67조(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에 따른다.
- ⑨ 사업시행자는 매년도 실제사용료 수입이 본협약 <별첨5>(추정 사용료 및 운영수입)의 불변가격 추정사용료수입에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반영한 금액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공헌이익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무관청에 지급하여야 한다. 본 항에 따른 지급에 대해서는 제3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제 10 장 투자위험 이외의 위험분담에 관한 사항

제64조 (위험배분의 원칙)

- ①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은 당해 위험에 대한 귀책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 ②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위험의 경우 일차적으로는 관련보험으로 처리하기로 하며, 보험으로 처리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본 협약에 따라 각각의 부담비율을 정하기로 한다.

제65조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처리)

- ① 다음 각 호의 사유들은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보나,

이들 사유에 한정되지 않는다.

1. 사업시행자가 법령 또는 본 협약에 정한 사항들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민간 투자법 제46조(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에 따른 주무관청의 처분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을 부설시공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본 사업시설의 준공예정일(본 협약에 의한 연장기일 포함)을 초과하여 준공하여 지연배상금이 발생하는 경우
 3. 사업시행자가 파산 또는 회생 절차를 신청하거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파산신청, 회생절차 개시신청,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신청 등이 있는 경우
 4. 사업시행자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 및 청산을 결정한 경우(합병을 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주무관청의 귀책사유나 불가항력적 사유 이외의 사유로 본 사업을 위한 자원(자본금 및 자금차입)의 조달·투입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6. 실시계획 승인 시 정한 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7. 본 협약 제18조(실시계획의 승인과 변경 승인)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지 않거나 제18조(실시계획의 승인과 변경 승인) 제4항 또는 본 협약 제36조(실시계획 승인 후 부대사업 시행)에 따라 실시계획의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변경 승인을 얻지 않는 경우
 8. 정당한 사유없이 본 협약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의 개시를 지연하거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 유지관리 및 운영을 중단한 경우
 9. 사업시행자가 본 협약 제16조(자금차입), 제78조(출자자 및 출자지분의 변경), 제79조(자금재조달의 절차) 또는 제76조(양도 및 담보의 제공) 등 본 협약에서 정한 출자자 변경, 자금조달 및 자금재조달에 관한 사항 또는 양도 및 담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무관청의 동의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동의 또는 승인을 얻지 아니한 경우
 10. 사업시행자가 본 협약 제81조(자금재조달 여건 보고 및 주무관청의 자금재조달 요청 등)에 따른 자금재조달 여건보고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자금재조달 요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를 소명하지 아니하고 자금재조달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추가비용이나 수입손실에 대하여는 총사업비의 변경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66조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및 처리)

- ① 다음 각 호의 사유들은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주무관청의 귀책사유로 보나, 이들 사유에 한정되지 않는다.
1. 사업시행자 귀책사유나 불가항력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무관청이 본 사업 시설, 본 사업시행권에 대하여 몰수한 경우
 2. 주무관청의 부지제공, 보상업무 등의 지연으로 인하여 공사의 착수 또는 시행이 3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
 3. 본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과 관련된 인허가 협의의무를 포함한 행정처리 지연 등 본 협약 및 관련 법령에 정한 주무관청의 명시적 의무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건설기간 중 그로 인한 치유 및 회복에 필요한 기간만큼 공사착수시기를 연기하거나 공사기간을 연장하고 주무관청의 귀책사유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서 사업시행자에게 실제 발생한 비용(공사기간 중 총사업비 증가분,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 운영비 증가분)을 배상하도록 한다.

제67조 (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

- ① 사업기간 중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불가항력 사유로서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 홍수, 해일, 화재, 화산폭발, 산사태, 태풍, 비행기충돌, 등으로 인한 재해
 2. 전국적 또는 사회 산업전반의 파업
 3. 국가신용도, 이자율, 환율 등의 급격한 변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동 및 본 사업 환경의 급격한 변경으로 자금차입계약의 체결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시행자의 본 사업수익성에 현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4. 민간투자법, 민간투자법 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기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정책의 변경이 사업시행자에게 직접적이고 현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다만, 정부의 요구나 방침 등으로 인하여 본 협약에 따라 결정된 사용료보다 낮은 수준의 사용료를 징수하게 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은 주무관청의 책임으로 함.
 5. 제2항에 정한 불가항력 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된 사유로 명시되지 아니한 그 밖의 사유로서 1호 내지 4호에 준하는 사유

- ②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불가항력 사유 중 정치적 불가항력 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쟁 또는 사변, 적국의 침공행위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2. 핵폐기물, 화학 또는 방사능에 의한 부지의 오염
 3. 폭동, 테러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4. 환전 및 해외송금 통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 ③ 공사기간 중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 해당사유 치유에 소요된 기간만큼 공사착수시기를 연기하거나 공사기간을 연장하며 그에 따라 관리운영권 설정 개시일을 연기한다.
 2. 총사업비가 증가하는 경우 다음 각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 가. 비정치적 불가항력 위험으로 인한 경우 주무관청은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의 80% 한도 내에서 사업시행자와 협의 결정하여 부담하기로 한다.
 - 나. 정치적 불가항력 위험으로 인한 경우 주무관청은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의 90%를 부담한다.
 - 다. 위 ‘가’ 호 및 ‘나’ 호에서의 보험은 본 협약에서 정한 보험가입의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수령 가능한 보험금을 기준으로 한다.
- ④ 운영기간 중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1. 본 사업시설의 복구 등과 관련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처리한다.
 - 가. 비정치적 불가항력 위험으로 인한 경우 주무관청은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의 80% 한도 내에서 사업시행자와 협의 결정하여 부담하기로 한다.
 - 나. 정치적 불가항력 위험으로 인한 경우 주무관청은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의 90%를 부담한다.
 2. 운영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처리한다.
 - 가. 해당 불가항력사유의 처리기간 만큼 무상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나. 다만, 정부의 요구나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본 협약에 따라 결정된 사용료를 징수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은 주무관청이 이를 보상한다.
- ⑤ 제3항과 제4항의 보험은 본 협약에서 정한 보험가입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실제 수령한 보험금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실제 수령한 보험금이 보험계약 당시의 수령 가능한 보험금보다 적을 경우에

는 그 차액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보상하지 않는다. 제3항과 제4항의 주무관청 부담분에 관하여는, 협약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사용료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조정을 통하여 주무관청 부담분의 지급을 대신할 수 있다.

- ⑥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불가항력 사유 발생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동안 사업시행자의 대출금 또는 이자의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자금차입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기 위한 재정융자 또는 단기 차입에 필요한 협조를 하기로 한다.
- ⑦ 협약당사자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그 피해에 대하여 논의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치유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본 사업시설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68조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청구 및 이의신청)

- ① 협약당사자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능한 한 조속한 시기에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 및 그로 인한 청구내용을 적시하여 다른 협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불가항력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청구(“불가항력사유로 인한 청구”)를 한다.
- ② 불가항력사유로 인한 청구를 받은 협약당사자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당사자는 이의신청서가 타방 당사자에게 도착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청구의 내용에 대하여 합의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13장(분쟁의 해결)에 따라 처리한다.
- ③ 제2항에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청구의 내용은 확정된 것으로 본다.

제 11 장 협약의 종료

제69조 (기간만료로 인한 협약의 종료)

- ① 본 협약은 중도해지 되지 않는 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종료되고 이 경우 사업시행자의 관리운영권은 소멸한다.
- ② 본 협약이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만료로 종료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일 4년 전에 주무관청 또는 주무관청이 지정하는 자와 공동으로 본 사업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그 점검 결과에 따라 본 사업시설의 정상적인 기능유지를 위해 수리 또는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사업시행자의 비용으로 그 수리 또는 보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의한 점검, 수리 또는 보수를 모두 완료한 후,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일에 본 사업시설의 운영설비 및 그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포함한 관리운영권의 대상인 사업시설 전체를 주무관청에 무상으로 인계한다.
3. 제1호에서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에 무상으로 인계할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시설 등의 범위는 <별첨1>(본 사업의 범위)와 같다.
4. 제1호에서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 본 사업시설에 대한 공동점검을 위해 별도의 독립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5.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본 사업시설의 기능유지 및 성능보증과 관련한 운영비용 지출내역은 근거자료와 함께 연도별로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이 제1호에 의한 점검 또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54조의 2에 따른 관리운영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인계한 본 사업시설을 주무관청이 정상적으로 유지관리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에게 본 사업시설 등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고, 사업시행자가 이용한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요령 등의 자료를 제공하며 필요한 협력을 하기로 한다.

제70조 (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료)

- ① 주무관청에 의한 해지 -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협약을 해지하고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또는 관리운영권의 말소 등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민간투자법 제46조(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본 협약 제65조(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처리) 제1항 제1호의 사유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3. 본 협약 제65조(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처리) 제1항 제2호의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적 추진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거나 지연배상금이 총사업비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4. 본 협약 제65조(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처리)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5. 본 협약 제65조(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처리) 제1항 제5호의 재원조달이 6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6. 본 협약 제65조(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처리) 제1항 제6호의 공사착수 지연이 2개월 이상이 되거나 공사착수 후 사업시행을 1개월 이상 지연 또는 기피하여 사업의 계속적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본 협약 제65조(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처리) 제1항 제7호의 사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사유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본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에 장애가 된다고 주무관청이 판단하는 경우
 8. 본 협약 제65조(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처리) 제1항 제8호의 유지관리 및 운영의 거부 또는 중단이 6개월 이상인 경우
 9. 본 협약 제65조(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처리) 제1항 제9호의 자금조달 및 자금재조달 또는 양도 및 담보 제공과 관련한 사업시행자의 반복적인 위반이 있고,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여 본 사업의 정상적 추진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10. 민간투자법 제47조(공익을 위한 처분) 제1항 제1호, 제2호에 정한 사유의 발생 등 주무관청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의 해지시지급금은 주무관청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시지급금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11.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수요예측 재조사, 민자적격성 재조사 등으로 시행한 타당성 분석 결과, 타당성 판단 단계에서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주무관청 또한 본 사업의 계속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단, 본 사업의 착공 이전에 수요예측 재조사 또는 적격성 재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의 해지시지급금은 건설기간 중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에 준하여 지급한다.
- ② 사업시행자에 의한 해지 -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본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본 협약 제66조(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및 처리) 제1항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본 협약 제66조(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및 처리) 제1항 제2호,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본 사업시설의 공사 또는 운영이 6개월 이상 지연 또는 중단되는

경우

3. 기타 본 협약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서면통지를 받고도 주무관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자가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통지를 발송한 경우, 주무관청이 그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그 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
- ③ 기타 사유로 인한 해지 - 다음 각 호의 경우 협약당사자는 본조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본 협약 제67조(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에 정한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협의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2. 국가유산과 관련한 고고학적 작업이나 위험물 발견으로 인한 예방책 또는 중화책이 시행되고 당해 사유가 발생한 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한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동 사유가 치유되지 아니하여, 당해 지역 공사의 진행 또는 본 사업의 관리 및 운영이 1년 이상 지체되거나 어느 협약당사자가 자기 의무의 중대한 부분을 1년 이상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자금차입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자금차입계약이 동 계약상의 기한 이전에 종료(또는 해지)되고 6개월 이내에 대체자금제공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 단, 동 사유가 주무관청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주무관청이 각 해지 통지를 할 수 있으며, 협약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협약당사자 일방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지통지를 할 수 있다.
- ④ 본조에 따라 협약당사자가 본 협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협약당사자가 문제해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명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본 협약을 해지하는 자가 부담한다.
- ⑤ 본조에 따라 해지권을 갖는 협약당사자(“해지권자”)는 본조에서 정한 협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해지사유의 발생사실과 90일 이내의 기간(“치유기간”)을 정하여 당해 사유의 치유를 요구하거나 치유를 위한 협의를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치유기간 내에 당해 사유가 치유되지 아니하거나 치유를 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해지권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해지의 효력은 해지통지의 도달로써 발생한다. 다만, 본 협약 제77조(사업시행자의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변경에 관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해지권자는 해지통지를 유보한다.

- ⑥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된 본 협약의 해지에 관한 권리와는 별도로,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법 제59조(매수청구권의 인정)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에 매수청구를 한 경우 주무관청의 매수청구인정 통지가 사업시행자에게 도달한 날에 본 협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71조 (협약해지시의 효과)

- ① 본 협약 제70조(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료)의 규정에 따라 본 협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해지시점에서 본 사업시설(건설기간 중의 경우 기성부분)은 즉시 주무관청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의 권리, 권한 등이 소멸하며, 관리운영권도 말소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가 제3자와 체결한 계약을 주무관청이 승계하기로 한 경우 가능한 한 조속한 시간 내에 승계가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 ③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 대한 대가의 지급 없이 모든 비품, 구조물, 설비, 고정 및 이동식 설비, 또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타 모든 동산과 예비부품 재고를 포함하는 사업시행자가 소유한 자산 및 본 사업시설과 관련하여 보유하거나 사용 중인 모든 사업시행자의 권리와 자산을 취득, 인수한다.
- ④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이 해지된 경우 본 사업과 관련한 모든 문서 및 기록, 건설도면과 함께 유지관리 및 운영 계획서를 주무관청에 제공한다.
- ⑤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이 해지된 경우 주무관청이 지정하는 자와 공동으로 본 사업시설에 대한 실사 및 점검을 수행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본 사업시설을 주무관청에 이전한다.

제72조 (해지시지급금의 산정)

- ① 협약당사자는 해지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에 의하여 <별첨12> (해지시지급금)에 따라 해지시지급금을 정한다. 이 경우, 기투자민간투자자금은 실제 기투자 민간투자금을 기본으로 하되, 실시협약상 당사자가 합의한 민간투자비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본 협약 제63조(매년도 위험분담금의 지급 및 환수금 환수) 제2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환수할 환수금 중 미환수된 금액이 있을 경우 당해 미환수 금액은 해지시 지급금에서 차감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독립기관을 지정하여 해지시 지급금을 산정하도록 한다.

- ③ 제2항에 의해 선정된 독립기관은 선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4항에 따라 해지시지급금을 산정하여 이를 협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④ 독립기관에 의해 해지시지급금을 산정하는 경우 그 비용은 귀책사유를 발생시킨 당사자가 전액 부담하고,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해지의 경우에는 협약당사자가 동등하게 부담한다.
- ⑤ 해지시지급금에 관하여 독립기관이 산정한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본 협약 제13장(분쟁의 해결) 절차에 따른다.
- ⑥ 본 협약에 따라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해지시지급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한다.
 1. 본 협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 등에 관하여 어떠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동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 사업시설의 복구에 투입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는 경우 동 보유금액상당을 공제한다. 다만, 본 협약에서 정한 보험가입의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수령 가능한 보험금을 기준으로 한다.
 2. 본 협약이 해지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채권금융기관등에 대하여 상환을 완료하지 못한 채무를 주무관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면책적으로 인수하거나 제3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면책적으로 인수하게 한 경우 주무관청 또는 제3자가 면책적으로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단, 제3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채권금융기관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3조 (해지시지급금 지급방법)

- ① 주무관청은 본 협약 제72조(해지시지급금의 산정)에 따라 산출된 해지시지급금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자금차입계약에 따라 조달한 금액 중 해지일 현재 미상환원리금이 있을 경우 주무관청은 이를 자금차입계약(들)상 정당한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해지시지급금을 지급받기 전이라도 주무관청이 요청하는 시기에 본 사업시설 등 본 사업 관련 주무관청이 요구한 일체의 설비나 권리 등을 이전하기로 한다.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로부터 본 사업시설 등 본 사업 관련 주무관청이 요구한 일체의 설비나 권리 등을 이전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미지급 해지시지급금에 대하여 그 다음날로부터 실제지급일까지 기준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주무관청 귀책사유로 본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의 해지시지급금은 주무관청이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배상액을 포함한 금액이며, 사업시행자는 해지시지급금을 지급받는 외에 주무관청에게 본 사업의 중도해지로 인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제1항, 제2항의 경우 주무관청은 관련 법령상 또는 달리 가질 수 있는 상계권에 추가하여 본 협약상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금액과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한 후 상계할 수 있다.

제74조 (매수청구권)

- ①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법 제59조 및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40조가 정한 절차에 따라 주무관청에 본 사업의 매수를 요청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되거나 총사업비가 5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2. 천재지변·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시설의 운영이 중단되거나 시설의 보수 또는 재시공비가 당초 총사업비의 5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3. 실시협약에서 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행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사유 발생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여 당해 시설의 공사 또는 운영이 6개월 이상 지연 또는 중단된 경우
- ② 사업시행자의 매수청구에 따른 매수가액(이하 “매수가액” 이라고 한다.)은 해지시지급금 산정기준에 따라 사유별로 불가항력 또는 주무관청 귀책에 준하여 산정한다.

제75조 (기간만료, 해지 및 매수청구시 선관의무)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상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만료, 협약의 해지 또는 매수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시설에 대하여 협약상 의무 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원만한 이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 12 장 권리의 처분 및 자금제조달

제76조 (양도 및 담보의 제공)

- ① 민간투자법 또는 본 협약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의 사전승인 없이 본 협약 상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 ②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채권금융기관등에게 본 협약, 관리운영권 및 설계, 공사 등의 도급계약상 권리 및 의무, 동산, 수입, 은행계좌, 지적재산 또는 기타 권리 및 자산을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본 협약상 권리 및 관리운영권에 대한 담보설정을 위해서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기로 한다.

제77조 (사업시행자의 변경)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 또는 민간투자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본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계속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77조의2 (대체자의 선정)

- ① 본 협약 제70조(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료)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해지사유 발생을 통지한 후 치유기간 내에 당해 사유의 치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치유를 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또는 채권금융기관의 어느 기관이 사업시행자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통지를 한 경우, 채권금융기관(또는 대리은행)은 서면통지(“대체사업자 추천통지”)를 통해 사업시행자를 대체할 사업자를 주무관청에 추천할 수 있다.
- ② 대체사업자 추천통지를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 및 채권금융기관에게 추천된 대체사업자의 수용 여부에 대하여 통지한다.
- ③ 주무관청과 채권금융기관 및 수용된 대체사업자가, 주무관청의 대체사업자 선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본 항에 언급된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자금차입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사유의 시정을 위한 기간 및 방법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채권금융기관은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주무관청에 대한 대체사업자 추천통지를 취소하는 서면통지(“취소통지”)를 보낼 수 있고, 주무관청 또한 대체사업자의 수용을 취소(“수용취소”)할 수 있다. 취소통지나 수용취소가 있는 경우, 또는 대체사업자가 본조 제2항에 따라 수용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체사업자는 선정되지 않은 것으로 하며, 당사자들의 권리는 마치 추천통지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본 협약에 따라 결정한다.

제78조 (출자자 및 출자지분의 변경)

- ① 사업시행자인 (가칭)남양주에코에너지주식회사의 출자자(이하 예정출자자를 포함한다) 구성 및 그 지분율은 <별첨7>(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과 같다.
- ② 사업시행자는 전체 출자지분(이하 예정출자지분 포함한다) 중 5% 이상의 출자지분을 가진 출자자(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기업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그 공동출자규모가 전체 출자지분의 5% 이상이 되는 경우 당해 공동출자에 참여한 5% 미만의 지분율을 가진 개별 기업 포함)를 변경하거나 그 출자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출자자간 합병에 의한 지분율 변경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합병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전체 출자지분 중 5% 미만의 출자지분을 가진 출자자(또는 제2항에서 주무관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출자자를 제외한 출자자)가 그 출자지분을 변경하는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내용을 주무관청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준공 시까지 사업시행자 지정 당시의 출자지분을 변경할 수 없다. 단, 출자자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출자가 곤란한 경우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하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79조 (자금재조달의 절차)

-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 체결 이후 자금재조달(Refinancing)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자금재조달과 관련된 계획을 주무관청에 사전 통보하고 수시로 자금재조달 진행과정을 보고 및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자금재조달 추진시 공정한 시장가격 및 조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건설기간 중 자본구조 변경시에는 본 협약에 명시된 자기자본 비율을 유지해야 하며, 운영기간 중 자본구조 변경 시에는 사업시행자의 자기자본비율은 자금재조달 당시 감사보고서상 건설보조금을 제외한 관리운영권 잔액의 1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최종적인 자금재조달 내용에 대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의 판단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자금재조달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업시행조건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실시협약을 변경하기로 한다.
- ⑤ 주무관청은 공공투자관리센터 등 관련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자금재조달과 관련한 사업시행자와의 협의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⑥ 자금재조달의 구체적인 절차에 관해서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및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에 따른다.
- ⑦ 사업시행자는 제4항의 실시협약 변경이 이루어진 후 출자자 변경 약정 또는 자금차입약정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체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관련 내용을 주무관청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 ⑧ 주무관청은 제7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제4항에 따라 변경된 실시협약과 그 조건이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자금재조달 이익의 재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이를 변경 실시협약에 반영한다.

제80조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의 공유)

- ① 자금재조달이 이루어지는 경우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에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기로 하며, 협약당사자 간 이익공유의 비율은 40(주무관청):60(사업시행자)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은 자금재조달에 따른 기대이익 증가분을 말한다. 기대이익 증가분은 가중평균자본비용 효과로 인한 이익(본 협약 체결 이후 자본구조 변경에 따른 가중평균자본비용 하락으로 발생한 사업시행자 및 출자자의 기대이익 증가분)과 출자자 기대수익률 증가이익(조기배당효과와 타인자본의 조달조건 변경 효과로 인하여 출자자의 정상투자 수익률이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으로 구성된다.
- ③ 주무관청은 자금재조달에 따른 주무관청 측 공유이익을 사용료 인하 등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 ④ 자금재조달의 범위, 자금재조달 이익공유의 요건, 공유비율, 이익의 산정방법 및 기준시점, 이익의 사용처 및 사용 시점 등에 대해서는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자금재조달 당시 시행 중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근거한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 제3자 제안공고에서 규정한 자금재조달 관련 세부지침 및 조건에 따른다.

제81조 (자금재조달 여건 보고 및 주무관청의 자금재조달 요청 등)

-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 체결 이후 매년 (4월 30일)에 주무관청에 출자자 또는 자본구조의 변경, 자금차입계약 조건의 변경 등 자금재조달 여건 발생여부를 자금재조달 세부 요령에 따라 보고하도록 한다.
- ② 주무관청은 제1항의 내용을 참고하여 사업시행자가 자금차입 약정 체결 당시 보다 더 좋은 조건의 자금재조달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자금재조달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의 자금재조달 요청에 대하여 자금재조달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주무관청에 소명하도록 한다.

제 13 장 분쟁의 해결

제82조 (분쟁의 해결)

- ①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한다. 다만 분쟁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협의를 결렬된 것으로 본다.
- ② 일방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이의를 제기한 당사자는 이의가 없는 금액을 우선 지급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우선 지급금액은 지급되어야 할 날로부터 실제 지급일 전일까지 기준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④ 협약당사자는 분쟁해결을 위하여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설치된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활용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제83조 (중재)

- ① 본 협약 제82조(분쟁의 해결)에 따라 해결되지 않은 본 협약과 관련한 모든 분쟁은 본 협약의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대한민국 서울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과 대한민국 법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중재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중재에 회부되지 못하는 경우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상 분쟁에 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 14 장 기타 사항

제84조 (변경 실시협약의 체결과 재무모델의 반영)

- ① 본 협약은 협약당사자가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서면 약정에 의하여만 변경되거나 보완될 수 있다. 다만, 본 협약상 본 협약 체결 이후에 확정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들에 관하여는 본 협약에 따라 동 항목들에 관한 수치가 결정되고 협약당사자가 이를 확인하는 경우 별도의 변경협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그 합의된 수치에 따라 본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② 본 협약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실시협약 및 재무모델을 변경하도록 한다.
 1. 본 협약 제13조(총사업비의 변경)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사자가 합의하여 총사업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본 협약 제36조(실시계획 승인 후 부대사업 시행)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 이후에 제안한 부대사업 시행계획을 주무관청이 승인하고, 이 부대사업 시행 조건을 반영하기 위한 경우
 3. 본 협약 제41조(운영비용) 제2항에 따라 협약당사자가 운영비용의 현저한 증감을 이유로 사용료,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또는 보조금의 조정을 요구하는 경우 당사자가 합의하여 운영비 변경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4. 본 협약 제41조의2(법인세법 변경시 처리)에 따라 법인세율 변경, 과세 관청의 손금 인정 확정 등 조세 관련 법령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경우
 5. 본 협약 제67조(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에 따라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사 착수시기 연기, 공사기간의 연장, 무상사용기간의 연장 등을 반영하기로 합의한 경우
 6. 본 협약 제79조(자금재조달의 절차) 제4항 및 제80조(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의 공유)에 따라 자금재조달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업시행조건을 반영하는 경우
-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현재의 재무모델 및 변경이 필요한 사유, 변경의 조건, 변경 효과 등을 산출하는 근거와 함께 변경 재무모델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 ④ 주무관청은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무모델을 검토한 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주무관청이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무모델을 검토하여 동의하는 경우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시정하여 제출한 변경 재무모델을 동의하는 경우에는 변경 재무모델을 첨부하여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한다.
- ⑥ 주무관청은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민간투자법령 및 민간투자사업 기

본계획에 따른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 민자적격성 재조사 및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항인 경우 변경 실시협약 체결 이전에 절차를 완료하도록 한다.

제84조의2 (본 협약 변경 제안 등)

- ①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 체결 후 제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본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본 협약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고, 이 경우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의 변경 여부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 ② 협약당사자는 협약의 변경여부와 변경할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 본 협약 체결 후 제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민간투자법의 취지와 사업시행자에게 본 협약에 따른 본 사업을 통하여 사업수익성이 확보되는지의 여부 및 본 협약에 규정된 협약당사자간의 위험배분의 원칙이 유지될 수 있게 되었는가의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 ③ 본 사업기간 중에 민간투자법 및 민간투자법 시행령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관련 법령 및 제도가 개정되어 그 개정내용이 본 사업의 원활한 운영 또는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해 본 협약을 조정, 변경할 수 있다.

제85조 (협약의 수익자)

본 협약은 협약당사자 및 그 승계인, 허용된 양수인에 대하여 효력을 지닌다. 본 협약의 어떠한 조항도 협약당사자 및 그 승계인, 허용된 양수인 이외의 자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취지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86조 (주무관청의 협약준수 의무)

주무관청은 자신이나 그 자산 또는 수입에 대하여 소송, 집행, 가처분이나 기타 법적 절차에서 본 협약에 따른 주무관청의 의무사항에 대하여 통치행위 등을 이유로 한 면책 주장을 하지 않기로 하며, 이는 취소할 수 없다.

제87조 (일부무효)

특정 관할 법률상 규정의 위법, 무효나 집행불가능은 그 범위 내에서만 그 관할에서의 유효성, 적법성이나 집행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며, 기타 다른 관할 법률과

본 협약상 또는 타 규정의 적법성, 유효성 또는 집행가능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8조 (묵시적 조건의 배제)

본 협약은 법률이나 관습에 함축되어 있는 보장, 조건이나 기타 보증, 협약당사자 간의 기타 약정, 또는 협약당사자 간에 체결된 구속력이 있는 법적인 서면 약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진술을 명시적으로 배제시킨다.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의 체결이 이와 같이 배제되는 여하한 보장, 조건, 보증, 약정이나 진술에 근거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확인한다.

제89조 (정보공개 및 비밀유지)

- ① 주무관청은 본 협약의 내용을 민간투자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본 협약의 공개시 사업시행자의 경영상·영업상 민감한 정보를 삭제한 후 공개하도록 한다.
- ③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중 누구도 다음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없다.
 1. 현재 또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공지의 사실이 된 정보의 공개
 2. 관련 협약당사자로부터 직·간접적으로 획득하지 않은(공개일에 서면기록으로 입증되는 바와 같이) 협약당사자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
 3. 법에 의하여 그 공개가 요구되어지는 정보의 공개
 4. 중재, 재판 또는 행정절차에 따른 정보의 공개
 5. 정보공개 당사자의 법률자문,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 등에 대한 정보의 공개
 6.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법령과 기본계획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심의,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신청 또는 공공투자관리센터 또는 전문기관의 검토 의뢰 시 해당 기관에 대한 정보의 공개
- ④ 협약당사자는 선의의 경우에는 다음의 자에게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의 계열회사
 2. 협약당사자를 대리하는 외부설계사, 시공자, 고문이나 자문인
 3. 협약당사자가 본 협약과 관련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관 및 그 자문인
 4. 본 협약에 언급된 보험증서 또는 보험제안서상 보험자

5. 협약당사자의 임원, 직원, 대리인 또는 하수급자
6. 기타 주무관청이 본 사업과 관련된다고 인정하는 관계기관
- ⑤ 제3항의 공개는 협약당사자가 본 협약이나 본 협약에 따른 기타 계약을 이행, 준수하고 본 협약상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집행하는데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제90조 (통지)

- ① 본 협약상의 통지나 문서의 송달은 다음의 주소 또는 협약당사자가 지정하는 주소로 하여야 한다.
 1. 주무관청에 대한 통지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금곡동)

수신 : 남양주시장

참조 : 남양주시 환경정책과장

전화 : 031-590-4881

팩스 : 031-590-2249
 2. 사업시행자에 대한 통지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6(장교동)

수신 : (가칭)남양주에코에너지주식회사 대표이사

참조 : (주)한화 인프라사업부 자원순환팀장

전화 : 02-729-2219

팩스 : 02-729-4415
- ② 협약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협약상대방에게 그 변경된 주소를 통지하여야 하며, 본 통지는 협약상대방에게 송달된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③ “송달된 때”라 함은 우편인 경우는 직접 당해 주소에 송달된 때, 팩스에 의한 경우에는 전송확인이 되는 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통지가 송달된 날이 영업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통지는 다음 영업일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91조 (언어)

- ①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의 모든 의사교환은 한국어로 한다.
- ② 본 협약은 한글본으로 작성되며, 한글 이외에 다른 언어로도 작성된 경우에는 한글본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92조 (준거법)

본 협약은 대한민국 법에 의거하여 규율되고 해석된다.

제92조 (협약의 효력)

- ① 제6조에 의한 사업시행법인이 설립되는 경우 본 협약상 사업시행자의 권리와 의무는 동 법인에 그대로 승계된다.
- ② 본 협약은 그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며 협약의 종료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 ③ 본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자 기명날인한 후 각기 1부 씩 보관한다.

2025년 00월 00일

[주무관청]

대한민국 남양주시장 주광덕 (서명)

[설립예정법인]

사업시행자 (가칭)남양주에코에너지주식회사
대표회사 (주)한화 대표이사 김승모 (서명)

[실시협약 별첨]

목 차

- 별첨 1 (본 사업의 범위)
- 별첨 2 (총사업비 및 총투자비)
- 별첨 3 (건설보조금 지급일정)
- 별첨 4 (사용료 산정을 위한 추정 폐기물량)
- 별첨 5 (추정 사용료 및 운영수입)
- 별첨 6 (운영비용)
- 별첨 7 (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
- 별첨 8 (자금투입계획)
- 별첨 9 (성능보증 및 규제조치)
- 별첨 10 (보험가입)
- 별첨 11 (사회기반시설 준공보고서 및 준공 확인필증)
- 별첨 12 (해지시지급금)
- 별첨 13 (미보전 대상 민간투자비 상환 계획)
- 별첨 13-1 (투자위험분담 기준금 산정방법)
- 별첨 14 (재무제표 및 재무모델)

별첨 1 (본 사업의 범위)

1. 사업요약

본 사업의 주요 사업시행조건은 <표 1-1>과 같다.

<표 1-1> 사업비

항 목		내 용		비 고
1	총사업비(불변)	185,219백만원		
2	총운영비	131,928백만원		법인세 별도, 매입세액불공제액(5,547백만 원)포함
3	총투자비(경상)	213,688백만원		
	- 자기자본	12,586백만원		
	- 타인자본	71,322백만원		
	- 건설보조금	129,780백만원		
4	세후수익률	명목	실질	
		4.95%	2.89%	
	세전수익률	5.01%	2.95%	
5	사용료	112,837원/톤		부가가치세 별도
6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20년		

※ 2020년 11월 30일 불변가격 기준

※ 총투자비는 경상가격 기준(물가상승률 2.0% 기준)

2. 본 사업의 범위 및 규모

본 사업시설의 범위는 <표 1-2>와 같다.

<표 1-2> 시공 및 운영 범위

구 분	내 용	비 고
시공	1. 사업지역: 경기도 남양주시 경강로 163번길 44일원 2. 사업부지 면적 : 21,015m ² 3. 사업규모 - 소각시설 250톤/일(125톤/일 x 2기) - 굴뚝전망대 - 소각여열회수시설 - 지역난방 열공급시설 - 주민편의시설	본 사업 시설
운영	- 소각시설 250톤/일(125톤/일 x 2기) - 소각여열회수시설 - 지역난방 열공급시설	운영기간은 본 협약 제10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에 따른다.

별첨 2 (총사업비 및 총투자비)

1. 총사업비 및 총투자비

본 사업의 총사업비 및 총투자비는 <표 2-1>과 같다.

<표 2-1> 총사업비 및 총투자비

(단위: 백만원)

항 목	내 용	비 고
가. 조사비	97	
나. 설계비	6,525	
다. 공사비	150,396	
라. 보상비	-	
마. 부대비	9,859	
건설사업관리비	5,118	
설계의경제성검토비	195	
재해영향성검토	19	
소규모재해영향평가	34	
전략환경영향평가비	250	
환경영향평가비	1,128	
사후환경영향조사비	798	
사업타당성분석비	97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29	
도시계획시설결정	85	
통합환경인허가	125	
지하안전평가	64	
착공후지하안전조사	265	
공사보험료	527	
사업이행보증보험료	61	
금융부대비용	1,062	
바. 운영설비비	566	
사. 제세공과금	17,224	
농지전용부담금	549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8	
생태보전협력금	13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액	15,688	
취득세	946	
아. 영업준비금	553	
신주발행비	60	
개업비	493	
소계(총사업비)	185,219	
정부재정지원금(불변)	115,039	
총민간사업비	70,180	
자. 물가변동비	22,903	
차. 건설이자	5,566	
계(총투자비)	213,688	
건설보조금(경상)	129,780	
총민간투자비	83,908	

※ 2020년 11월 30일 불변가격 기준

※ 총투자비는 경상가격 기준(물가상승률 2.0% 기준)

2. 연도별 총사업비 및 총투자비 투입일정

본 사업의 연도별 총사업비 및 총투자비 투입일정 <표 2-2>와 같다.

<표 2-2> 연도별 총사업비 및 총투자비 투입일정

(단위: 백만원)

항 목	합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가. 조사비	97	97	-	-	-
나. 설계비	6,525	6,525	-	-	-
다. 공사비	150,396	25,066	50,132	50,132	25,066
라. 보상비	-	-	-	-	-
마. 부대비	9,859	4,816	2,022	2,022	998
바. 운영설비비	566	-	-	-	566
사. 제세공과금	17,224	3,897	4,930	4,930	3,468
아. 영업준비금	553	174	152	152	76
소계(총사업비)	185,219	40,574	57,235	57,236	30,174
자. 물가변동비	22,903	3,929	6,533	7,808	4,633
차. 건설이자	5,566	313	1,627	2,253	1,374
계(총투자비)	213,688	44,815	65,395	67,297	36,181

※ 2020년 11월 30일 불변가격 기준

※ 총투자비는 경상가격 기준(물가상승률 2.00% 기준)

별첨 3 (건설보조금 지급일정)

1. 건설보조금 지급일정

본 사업의 건설보조금 지급일정은 <표 3-1>와 같다.

<표 3-1> 건설보조금 지급일정

(단위: 백만원)

구분		불변가격				경상가격				비고
		중앙 정부	지자체		계	중앙 정부	지자체		계	
			국고	지방비			원인자 부담금	국고		
2025년	4분기	3,625	5,015	1,818	10,458	3,989	5,518	2,001	11,508	
2026년	1분기	3,625	5,015	1,818	10,458	4,009	5,546	2,011	11,566	
	2분기	3,625	5,015	1,818	10,458	4,029	5,574	2,021	11,623	
	3분기	3,625	5,015	1,818	10,458	4,049	5,601	2,031	11,681	
	4분기	3,625	5,015	1,818	10,458	4,069	5,629	2,041	11,738	
2027년	1분기	3,625	5,015	1,818	10,458	4,089	5,657	2,051	11,797	
	2분기	3,625	5,015	1,818	10,458	4,109	5,685	2,061	11,855	
	3분기	3,625	5,015	1,818	10,458	4,130	5,713	2,071	11,914	
	4분기	3,625	5,015	1,818	10,458	4,150	5,742	2,082	11,973	
2028년	1분기	3,625	5,015	1,818	10,458	4,171	5,770	2,092	12,033	
	2분기	3,625	5,015	1,818	10,458	4,192	5,799	2,102	12,093	
합계		39,875	55,164	20,000	115,039	44,985	62,233	22,563	129,780	

※ 2020년 11월 30일 불변가격 기준

※ 경상가격은 연평균 물가상승률 2.0% 적용

2. 민간투자비 투입일정

본 사업의 민간투자비는 순수 민간조달액인 자기자본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조달하는 타인자본으로 구성되며, 투입일정은 <표 3-2>와 같다.

<표 3-2> 민간투자비 투입일정

(단위: 백만원)

구분		경 상 가 격			비고
		자기자본	타인자본	계	
2025년	1분기	-	-	-	
	2분기	610	-	610	
	3분기	11,976	16,181	28,157	
	4분기	-	4,540	4,540	
2026년	1분기	-	4,609	4,609	
	2분기	-	4,664	4,664	
	3분기	-	4,740	4,740	
	4분기	-	4,776	4,776	
2027년	1분기	-	4,848	4,848	
	2분기	-	4,905	4,905	
	3분기	-	4,983	4,983	
	4분기	-	5,022	5,022	
2028년	1분기	-	5,448	5,448	
	2분기	-	6,607	6,607	
합계		12,586	71,322	83,908	

※ 2020년 11월 30일 불변가격 기준

※ 경상가격은 연평균 물가상승률 2.0% 적용

별첨 4 (사용료 산정을 위한 추정 폐기물량)

본 사업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추정 폐기물량은 아래의 <표 4-1>과 같다.

<표 4-1> 사용료 산정을 위한 추정 폐기물량

년도	추정 폐기물량(톤)	
	일(톤/일)	연간(톤/년)
2028년	231.1	36,514
2029년	242.5	76,388
2030년	242.8	76,482
2031년	246.3	75,860
2032년	250.8	75,240
2033년	248.4	74,520
2034년	245.9	73,770
2035년	243.5	73,050
2036년	242.5	72,750
2037년	242.5	72,750
2038년	242.5	72,750
2039년	242.5	72,750
2040년	242.5	72,750
2041년	242.5	72,750
2042년	242.5	72,750
2043년	242.0	72,600
2044년	238.4	71,520
2045년	234.6	70,380
2046년	230.4	69,120
2047년	226.0	67,800
2048년	219.8	32,970
합계	5,040	1,455,464

별첨 5 (추정 사용료 및 운영수입)

본 사업의 추정 사용료 및 운영수입은 <표 5-1>과 같다.

<표 5-1> 추정 수입

(단위: 백만원)

년도	추정 사용료 및 운영수입(불변)				추정 사용료 및 운영수입(경상)			
	소각	전력 판매	열판매	합계	소각	전력 판매	열판매	합계
2028년	4,120	560	1,272	5,952	4,741	645	1,463	6,849
2029년	8,619	1,272	2,339	12,230	10,116	1,492	2,745	14,353
2030년	8,630	1,273	2,342	12,245	10,331	1,524	2,803	14,658
2031년	8,560	1,263	2,324	12,146	10,452	1,542	2,837	14,831
2032년	8,490	1,254	2,301	12,044	10,574	1,561	2,865	15,001
2033년	8,409	1,242	2,279	11,929	10,682	1,577	2,895	15,154
2034년	8,324	1,229	2,256	11,809	10,786	1,593	2,923	15,302
2035년	8,243	1,217	2,234	11,693	10,894	1,609	2,952	15,455
2036년	8,209	1,212	2,224	11,645	11,067	1,634	2,999	15,700
2037년	8,209	1,212	2,224	11,645	11,289	1,667	3,059	16,015
2038년	8,209	1,212	2,224	11,645	11,515	1,700	3,120	16,335
2039년	8,209	1,212	2,224	11,645	11,745	1,734	3,183	16,662
2040년	8,209	1,212	2,224	11,645	11,980	1,769	3,246	16,995
2041년	8,209	1,212	2,224	11,645	12,220	1,804	3,311	17,335
2042년	8,209	1,212	2,224	11,645	12,464	1,840	3,378	17,682
2043년	8,192	1,210	2,220	11,621	12,687	1,873	3,438	17,998
2044년	8,070	1,192	2,187	11,448	12,748	1,882	3,454	18,085
2045년	7,941	1,173	2,152	11,266	12,796	1,889	3,467	18,153
2046년	7,799	1,152	2,113	11,064	12,818	1,893	3,473	18,184
2047년	7,650	1,130	2,073	10,853	12,825	1,894	3,475	18,194
2048년	3,720	594	864	5,178	6,361	1,016	1,477	8,854
계	164,230	24,242	44,524	232,996	231,091	34,138	62,566	327,795

※ 2020년 11월 30일 불변가격 기준

※ 경상가격은 연평균 물가상승률 2.0% 적용

※ 본 협약에서 규정된 불변사용료 112,837원/톤 기준으로 산정함.

〈표 5-2〉 전력판매량 및 온수판매량 (기준질 기준)

년도	전력판매량 (MW/년)			온수판매량 (Gcal/년)			비고
	동절기	하절기	소계	동절기	하절기	소계	
2028년	2,820	3,762	6,582	45,425	-	45,425	동절기 : 105일 하절기 : 53일
2029년	5,186	9,756	14,942	83,529	-	83,529	동절기 : 184일 하절기 : 131일
2030년	5,192	9,768	14,960	83,632	-	83,632	동절기 : 184일 하절기 : 131일
2031년	5,152	9,682	14,834	82,993	-	82,993	동절기 : 180일 하절기 : 128일
2032년	5,101	9,628	14,729	82,162	-	82,162	동절기 : 175일 하절기 : 125일
2033년	5,052	9,536	14,588	81,376	-	81,376	"
2034년	5,001	9,440	14,441	80,557	-	80,557	"
2035년	4,952	9,347	14,300	79,771	-	79,771	"
2036년	4,932	9,309	14,241	79,443	-	79,443	"
2037년	4,932	9,309	14,241	79,443	-	79,443	"
2038년	4,932	9,309	14,241	79,443	-	79,443	"
2039년	4,932	9,309	14,241	79,443	-	79,443	"
2040년	4,932	9,309	14,241	79,443	-	79,443	"
2041년	4,932	9,309	14,241	79,443	-	79,443	"
2042년	4,932	9,309	14,241	79,443	-	79,443	"
2043년	4,922	9,290	14,212	79,279	-	79,279	"
2044년	4,849	9,152	14,000	78,100	-	78,100	"
2045년	4,771	9,006	13,777	76,855	-	76,855	"
2046년	4,686	8,845	13,531	75,479	-	75,479	"
2047년	4,596	8,676	13,272	74,038	-	74,038	"
2048년	1,916	5,063	6,978	30,860	-	30,860	동절기 : 75일 하절기 : 75일

별첨 6 (운영비용)

본 사업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 운영비용 내역은 <표 6-1>과 같다.

<표 6-1>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 운영비용 내역

(단위: 백만원)

항목	금액	비고
인건비	49,473	
제경비	5,296	
약품비	17,012	
전력비	5,609	
연료비	701	
상하수도비	1,362	
재처리비	492	
소모품비	494	
법정검사비	3,875	
시험분석비	135	
보수비	9,243	
대수선비	19,456	
유형자산대체비	1,410	
보험료	11,823	
운영비용 총계	131,928	법인세 별도, 매입세액불공제액 (5,547백만원) 포함
고정운영비 계	106,259	
변동운영비 계	25,669	

※ 2020년 11월 30일 불변가격 기준

※ 변동운영비: 운영비 항목 중 약품비, 전력비, 연료비, 상하수도비, 재처리비, 소모품비

※ 고정운영비: 변동운영비에 포함되지 않는 운영비

본 사업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 연도별 운영비용은 <표 6-2>와 같다.

<표 6-2>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 연도별 운영비용

(단위: 백만원)

년도	고정 운영비	변동 운영비	합계	년도	고정 운영비	변동 운영비
2028년	2,158	690	2,848	2039년	6,717	1,284
2029년	4,019	1,312	5,331	2040년	6,339	1,284
2030년	4,530	1,313	5,844	2041년	5,611	1,284
2031년	4,156	1,327	5,482	2042년	6,382	1,284
2032년	4,545	1,325	5,869	2043년	8,371	1,282
2033년	4,060	1,313	5,373	2044년	6,851	1,264
2034년	4,443	1,301	5,744	2045년	4,701	1,245
2035년	4,053	1,289	5,341	2046년	6,235	1,225
2036년	4,767	1,284	6,051	2047년	4,583	1,203
2037년	5,750	1,284	7,034	2048년	3,025	595
2038년	4,963	1,284	6,247	합 계	106,259	25,669

※ 2020년 11월 30일 불변가격 기준

※ 법인세 별도, 매입세액불공제액(5,547백만원) 포함

별첨 7 (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

본 사업의 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은 <표 7-1>과 같다.

<표 7-1> 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

(단위: 주, 백만원)

주주명	소재지	소유 주식수	금액	지분율 (%)	비고
(가칭)KIAMCO남양주에코에너지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일반)의 집합투자업자 케이디비인프라자산운용(주)	서울특별시	1,762,600	8,813	70.00%	재무적투자자
(주)한화	서울특별시	326,333	1,632	12.96%	건설출자자
정웅종합건설(주)	경기도 화성시	120,864	604	4.80%	건설출자자
한솔제지(주)	서울특별시	114,821	574	4.56%	건설출자자
(주)아름종합건설	경기도 남양주시	42,302	212	1.68%	건설출자자
(주)대신환경기술	경기도 용인시	105,756	529	4.20%	운영출자자
에코이앤오(주)	서울특별시	45,324	227	1.80%	운영출자자
계		2,518,000	12,590	100%	

※ 금액은 주당 액면 금액 5,000원 기준임.

별첨 8 (자금투입계획)

본 사업의 자금투입계획은 <표 8-1>과 같다.

<표 8-1> 자금투입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합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비고
총사업비(불변)		185,219	40,574	57,235	57,236	30,174	
	건설보조금	115,039	10,458	41,832	41,832	20,916	
	총민간사업비	70,180	30,116	15,403	15,404	9,258	
총투자비(경상)		213,688	44,815	65,395	67,297	36,181	
	건설보조금	129,780	11,508	46,607	47,539	24,126	
	총민간투자비	83,908	33,307	18,788	19,758	12,055	
	자기자본 (A)	12,586	12,586	-	-	-	
	타인자본 (B)	71,322	20,721	18,788	19,758	12,055	
자기자본비율 [A/(A+ B)]		15.0%		-	-	-	

※ 2020년 11월 30일 불변가격 기준

※ 경상가격은 연평균 물가상승률 2.0% 적용

별첨 9 (성능보증 및 규제조치)

1. 성능보증 기준

1.1 소각시설 성능보증 기준

구 분	보증범위	비 고
소각방식	연속 연소식 스토키 소각방식	
소각용량	250 (125×2)	톤/일
운전일수	가동 1~ 3년차 315 이상 가동 4년차 이상 300 이상	일/년
폐기물 발열량범위 (저위발열량 기준)	2,400 ~ 3,600 (고질:3,600kcal/kg, 기준질:3,300kcal/kg, 저질:2,400kcal/kg)	kcal/kg
소각능력	최대(기준질 기준 110) 최소(기준질 기준 70)	%
출구온도	850 이상	℃
연소가스 체류시간	2 이상	초
강열감량	5 이하	wt%
증기터빈발전기 용량	6.5	MW
온수열교환기 용량	온수열교환기A (HO-501):6Gcal/hr 온수열교환기B (HO-502):18.5Gcal/hr	Gcal/Hr

1.2 대기오염물질 성능보증

1.2.1 (농도기준) 성능보증 기준

항 목		단위	배출허용기준 ^{주)}	성능보증 기준
대기 오염 물질	SOx	ppm	20(12) 이하	20(12) 이하
	NOx	ppm	50(12) 이하	50(12) 이하
	HCl	ppm	12(12) 이하	8(12) 이하
	CO	ppm	50(12) 이하	50(12) 이하
	먼지	mg/Sm ³	10(12) 이하	10(12) 이하
다이옥신		ng-TEQ/Sm ³	0.1 이하	0.1 이하

주) 1. ()는 표준산소농도 (O₂의 백분율)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8]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제15조 관련)

단, 다이옥신은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시행규칙[별표3] 잔류성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 「환경영향평가법」 및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기준을 보증하여야 한다.

○ 성능보증 판정: 상시보증(정상적으로 측정된 30분 평균치인 TMS값)

1.2.2 (총량기준) 성능보증 기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총량관리 사업장 최적방지시설을 설치하고 할당된 배출허용 총량을 준수하여야 한다.

단, 할당된 배출허용총량이 없을 경우 같은 법에 따른 최적방지시설의 최종연도 농도를 기준으로 한다.

<최적방지시설의 최종연도 배출농도 기준>

항 목	단 위	배출허용기준 ^{주)}	성능보증기준
황산화물(SO _x)	ppm	5(12) 이하	5(12) 이하
질소산화물(NO _x)	ppm	12(12) 이하	12(12) 이하
먼지	mg/Sm ³	2(12) 이하	2(12) 이하

주) 1. ()는 표준산소농도 (O₂의 백분율)

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1] 대기오염물질별 최적방지시설의 기준 및 종류(제2조 관련)

※ 「환경영향평가법」 및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 기준을 보증하여야 한다.

○ 성능보증 판정: 총량보증

1.3 악취처리 성능보증 기준

본 사업시설에서 발생하는 배출 악취는 다음의 악취처리 성능보증 기준을 부합하여야 하며 배출 악취의 측정은 「악취방지법」에 의한다.

1.3.1 복합악취 배출허용 기준

시료채취위치	법정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	성능보증(희석배수)
배출구	500이하	500이하
부지경계선	150이하	150이하

주)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3]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범위(제8조 제1항 관련)의 ‘기타지역’ 적용

1.3.2 지정악취 배출허용기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3]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범위(제8조 제1항 관련)의 기준을 성능보증하도록 한다.

구분	단위	법정배출허용기준 (기기분석법)	성능보증 (기기분석법)
암모니아	ppm	1이하	1이하
메틸메르캡탄		0.002이하	0.002이하
황화수소		0.02이하	0.02이하
아세트알데히드		0.05이하	0.05이하
기타		기타 악취물질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3] 만족	

※ 본 사업시설에 대한 악취 측정에만 해당되고, 외부악취오염원 영향은 제외

1.4 소음·진동 성능보증 기준

본 사업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성능보증 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그 측정은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다.

1.4.1. 최소 성능보증 기준

구 분	소음 (dB(A))			진동 (dB(V))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주간 (06:00~22:00)	심야 (22:00~06:00)
배출허용기준	50이하	55이하	45이하	65이하	60이하
성능보증	50이하	55이하	45이하	65이하	60이하

주)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가” 지역 ‘사업장 기타’ 기준에 따름

1.5. 배출 폐수 처리 성능보증 기준

본 사업시설에서 발생하는 배출 폐수는 다음의 성능보증기준을 부합하여야 하며, 배출수의 측정은 수질오염 공정시험방법을 기준으로 한다.

구 분	연계처리기준		
	유량	농도	부하량
단 위	m ³ /일	mg/L	kg/일
BOD	50	120 이하	6.0 이하
TOC		75 이하	3.75 이하
SS		120 이하	6.0 이하
T-N		60 이하	3.0 이하
T-P		8 이하	0.4 이하

주) 1. 발생 폐수는 무방류 자체 재이용하며, 비상시에만 하수처리장 연계처리 예정

2.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 “나” 지역 기준에 따름

2. 규제조치 기준사항

본 협약의 기간 중 사업시행자는 위에서 정한 보증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지불하며, 모든 측정은 국가공인기관의 측정결과치로 한다.

2.1 본 협약의 기간 중에 사업시행자가 위에서 정하는 성능보증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규제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위반횟수	처분내용	비고
1~3회 위반	자체원인조사 및 조치결과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반회수 산정은 최근 처리시설의 1년간¹⁾ 위반을 적용 - 외부점검기관 점검결과 포함 적용 - 금액은 경상가액 적용
4~6회 위반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해당시설의 월 운영비용 ²⁾ 의 1%를 다음 월 사용료에서 감액	
7회 이상 위반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해당시설의 월 운영비용 ²⁾ 의 3%를 다음 월 사용료에서 감액	

주1) 위반회수의 산정은 기간을 정한 12개월의 사업연도 기간내의 위반회수 합계를 의미하며, 기 처분된 위반건은 회수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주2) 남양주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20년간 월평균 운영비용임.

2.1.1 관련법에 의한 행정처분은 별도 적용

2.1.2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에서는 수시로 지도 점검 가능

3. 손해배상액 납입방법

- 본 협약 기간 중 사업시행자는 위에서 정하는 보증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주무관청에 납부하여야 하며, 손해배상액은 다음 월 사용료에서 차감하여 지급한다.

4. 사업시행자의 면책

- 사업시행자는 다음의 경우 손해배상액을 지불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1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4.2 협약당사자가 관계법령의 변경 또는 사업범위를 초과하는 주무관청의 요구사항이 발생하여 이를 충족하기 위한 재원조달 및 설계 또는 추가공사의 착수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

별첨 10 (보험가입)

본 사업의 보험가입계획은 <표 10-1, 10-2>와 같다.

<표 10-1> 공사기간 중 가입 보험

항목	가입보험	부보범위	요율
보험명	1. 건설공사보험 (조립보험)	본 사업시설의 총 공사비와 운영설비비	0.30%
	2. 예정이익상실보험	운영개시후 1년간 고정비용(인건비와 제경비) 및 지급이자의 합계	0.58%
	3. 사용자배상책임보험	건설기간 중 법인직원 인건비	0.06%
보험 내용	1. 건설공사보험(조립보험) - 전공사 범위에서의 시공 중 사고 - 공사용 장비에 대한 사고 -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2. 예정이익상실보험 - 공사 목적물의 준공지연에 따라 발생하는 예정이익의 상실 보장 3. 사용자배상책임보험 - 법적 재해보상을 초과하여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손해 보장		
보험 기간	공사기간		

<표 10-2>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 가입 보험

항목	가입보험	부보범위	요율
보험명	1. 재물손해보험	공사비 및 운영설비비	0.34%
	2. 기업휴지보험	고정운영비용 및 1년간 차입금이자	0.46%
	3. 사용자배상책임보험	법인직원 인건비	0.06%
	4.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대인 대물 일괄1사고당	8백만원/년
보험 내용	1. 재물손해보험 - 재해 및 재산에 대한 배상책임 2. 기업휴지보험 - 사업 운영 중 본 사업시설물에 대한 사고로 인하여 정상적 운영이 불가하여 발생한 수익의 손실 담보 3. 사용자배상책임보험 - 법정재해보상(산재 등)을 초과하여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보상 4. 영업배상책임보험 - 영업행위와 관련한 제3자가 피해 발생시 보상		
보험 기간	관리운영기간		

별첨 11 (사회기반시설 준공보고서 및 준공 확인필증)

1. 사회기반시설 준공 보고서

사회기반시설 준공 보고서	
(1) 사업명	
(2) 공사의 종류	
(3) 사업시행위치	
(4) 사업시행규모	
(5) 사업 목적	
(6) 총공사비	
(7) 공사기간	
(8) 국가귀속 사업내용	
(9) 기타	
<p>「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기반시설 준공확인을 받고자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20 년 월 일</p> <p>신 청 자: 법 인 명</p> <p>대표자 성명: (인)</p> <p>법인등기번호:</p> <p>법 인 주 소:</p> <p>주무관청 귀하</p>	
구비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준공도서 (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 포함) 2.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준공 전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 4. 준공 전후의 토지 및 시설대비표 5. 기타 준공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2. 준공확인필증

준 공 확 인 필 증

신 청 자: 법 인 명

대표자 성명:

법인등기번호:

법 인 주 소:

귀사가 시행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준공 확인하고 본 필증을 교부합니다.

1. 사회기반시설명 (위치):
2. 공사의 종류:
3. 공사 장소:
4. 공사 목적:
5. 공사 기간 (준공년월일):
6. 준공 시설 (국가귀속여부):

20 년 월 일

남양주시장 (인)

별첨 12 (해지시지급금)

<매수 청구 및 해지시 지급금 산정기준>

- 건설기간중에는 기 투입 민간투자자자금을 기준으로 하되, 투입자금의 기획비용 보상범위는 귀책사유별로 지급수준을 차등화하여 산정
- 운영기간중에는 기 투입 민간투자자자금의 상각액과 미래기대수익의 현재액을 기준으로 하되 귀책사유별로 지급수준을 차등화하여 산정

※ 해지시지급금에 부과되는 매출부가세를 정부가 가산하여 지급

구분	건설기간	운영기간
사업자귀책	기투입 민간투자자금 ¹⁾	좌동의 정액법 상각잔액 ⁴⁾
비정치적 불가항력	기투입 민간투자자금× (1+ 표준차입이자율 ²⁾ (A))	상동의 정액법 상각잔액과 실적치에 근거한 미래기대현금흐름 ⁵⁾ 의 현재가치를 가중평균한 금액 ⁶⁾
정치적 불가항력	기투입민간투자자금 ×[1+(A+B)/2]	
정부귀책	기투입민간투자자금 ×(1+ 경상수익률 ³⁾ (B))	

1) 총민간투자비에서 건설이자를 차감

2) 건설기간 중 매년도 국채(5년만기)의 유통수익률의 연평균치를 각 연도말 현재 투입된 민간투자자금의 누적금액의 비율에 따라 가중평균한 값에 2%를 가산

3) 실질수익률에 건설기간 중 실적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계산

4) 기투입 민간투자자금을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정액법에 의해 상각한 잔액으로 하되, 사업자귀책의 경우 동 금액이 실시협약에서 예정한 선순위차입금 잔액을 초과하여 후순위차입금(미지급 이자 포함) 또는 자본금 상환 재원으로 사용될 경우 그 초과 금액은 제외(의미 명확화) <개정 2013.5.10., 2016.4.27.>

* 건설종료일부터 해지일까지의 물가변동분은 별도로 반영하지 않음

5) 해지시 실적치에 근거한 미래 불변기대수익의 흐름을 불변수익률로 할인한 금액으로 해지사유별로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적용(정부귀책:100%, 정치적 불가항력:90%, 비정치적 불가항력:80%)

6) [상각잔액×(1-잔여운영기간비율)]+[미래기대수익현재×(잔여운영기간 비율)]

7) 해지시점에 사업시행자가 타인자본조달조건 등의 요인으로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이를 해지시지급금에서 공제

8) 운영기간 동안 사업자귀책 외의 사유에 의한 해지시지급금이 사업자귀책의 해지시지급금보다 작을 경우 사업자귀책의 해지시지급금 적용

□ 주무관청 및 사업시행자는 매수청구권 실행 또는 협약 중도해지에 앞서 사업의 계속수행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함

- 협약의 이행을 위한 위험의 치유대책 협의 및 대체사업자 선정 등의 방법을 우선 강구
- 위험 발생시 협의절차를 실시협약에 명확히 규정하고 위험의 치유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 등을 설정

별첨 13 (미보전 대상 민간투자비 상환 계획)

본 사업의 미보전 대상 민간투자비 상환 계획은 <표13>과 같다.

<표13>미보전 대상 민간투자비 상환 계획

(단위: 백만원)

년도	미보전 대상 민간투자비	년도	미보전 대상 민간투자비
2028년	629	2039년	1,014
2029년	1,259	2040년	1,504
2030년	1,259	2041년	1,259
2031년	1,259	2042년	1,259
2032년	1,259	2043년	-
2033년	1,259	2044년	1,129
2034년	1,259	2045년	2,646
2035년	1,259	2046년	1,259
2036년	1,259	2047년	1,259
2037년	1,259	2048년	629
2038년	1,259	계	25,172

※ 경상기준 금액임

별첨 13-1 (투자위험분담 기준금 산정방법)

본 사업의 투자위험분담 기준금 산정방법은 아래 <표13-1>과 같고, 이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별표2-3]을 참고하여 작성된 것이다.

<표13-1>투자위험분담 기준금 산정방법

- 손익공유형의 주무관청 투자위험분담기준금

$$GC'_i = OC'_{fi} + TC_{spi} + TC_{up(i-1)} \times r_f$$

$$TC_{spi} = TC_{sp} \times \frac{r_d}{1 - (1 + r_d)^{-\text{운영기간}}}$$

- 손익공유형의 연도별 주무관청 환수기준금

$$GC'_i + NPTC_{upi}$$

- 손익공유형의 연도별 주무관청 위험분담금 및 환수금

- ① $OR'_i - OC'_{vi} < GC'_i$ 인 경우, i년도 주무관청 위험분담금

$$GP'_i = GC'_i - (OR'_i - OC'_{vi})$$

- ② $OR'_i - OC'_{vi} > GC'_i + NPTC_{upi}$ 인 경우, i년도 주무관청 환수금

$$GR'_i = (OR'_i - OC'_{vi} - GC'_i - NPTC_{upi}) \times \phi_i$$

n : 시설의 준공시점

N : 무상사용기간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종료시점

OR'_i : 매년도 경상가격 운영수입

OC'_{vi} : 매년도 실제수요 반영후 경상가격 변동 기준운영비용 (수요에 직접 영향 받는 운영비용)

OC'_{fi} : 매년도 경상가격 고정 기준운영비용(수요에 직접 영향 받지 않는 운영비용)

GC'_i : i 연도 경상가격 주무관청 투자위험분담기준금

GP'_i : i 연도 경상가격 주무관청 위험분담금

GR'_i : i 연도 경상가격 주무관청 환수금

TC_p : 총 민간투자비(= $TC_{sp} + TC_{up}$)

TC_{sp} : 보전대상 민간투자비(선순위 차입금과 협약에서 정한 금액 중 작은 금액)

TC_{spi} : i 연도 보전대상 민간투자비의 원리금(균등분할) 상환액

TC_{up} : 미 보전대상 민간투자비(총 민간투자비 중 보전대상 민간투자비를 제외한 금액)

$TC_{up(i-1)}$: 미 보전대상 민간투자비의 (i-1)연도 말 잔액

$NPTC_{upi}$: i 연도말 미 보전대상 민간투자비의 미회수액

$$= \frac{TC_{up}}{N-n} \times (i-n) - APTC_{up(i-1)}^*$$

* $APTC_{up(i-1)}$: (i-1)연도말까지 기회수된 미 보전대상 민간투자비 누적액

r_f : 5년만기 국채수익률(관리운영권설정일 직전 5영업일의 평균값을 적용하되, 5년마다 재산정함)

r_d : 보전대상 민간투자비 적용 협약 차입금리(= r_f + 위험보상율)

ϕ_i : i연도 주무관청의 환수비율

별첨 14 (재무제표 및 재무모델)

본 별첨은 사업시행자의 재정적 조건을 보여주는 본 협약 제47조 (사용료의 결정 및 조정) 제2항의 기준사용료를 산출해 낸 기초자료이다.

1. 재무제표: 재무모델 USB 참조

- 1) 추정대차대조표
- 2) 추정손익계산서
- 3) 추정현금흐름표
- 4) 불변현금흐름표

2. 재무모델 USB